

한미 FTA 저지하자!



1퍼센트만을 대변하는 이명박과 우파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한미FTA 저지 운동은 이미 큰 성과와 가능성을 보여 줬다. '1퍼센트' 지배자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모두 떠넘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그들은 우리의 분노와 힘을 보고 당황하고 있다.

누구의말일까요?

“원래 자동차 일을 해 봐서 좀 안다.”

이명박.

미국 노동자들 앞에서도 제 자랑

“퇴임 후 환경운동을 하겠다. 지속 가능한 녹색 미래를 위해 세계를 돌아다닐 것”

이명박.

세계적 명투기를 꿈꾸는가?

“꼴 같잖은 게 대들고, X도 아닌 게 대들고, 이까지 차올라 패버리고 싶다.”

홍준표.

대학생들에게 한나라당

개혁이 어렵다며

“적당한 썸 쳐달라.”

직장인들과 만난 홍준표.

공기업 초임 삭감은

물릴 수 없다며

“우리가 SNS에서 밀리는 건 SNS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를 못하기 때문”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

“이 정권은 도·국·동에서 시작 해서 내·국·동으로 끝날 것. ‘국’ 소리 들린다.”

한명숙

“박원순은 아름다운재단을 만들었고, 나경원은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었다.”

유시민

“그래, 되겠다.”

이상득.

한미FTA 비준 강행하면

이완용이 된다는 말에

“SD(이상득)가 문제야. ISD 폐기해야 한다.”

박지원

“이명박은 암암리에 박근혜를 죽이기 위해 박원순과 안철수를 기름과 동시에 … 도곡동 일대와 노현동 일대에 엄청난 냄새를 풍기는 오물 통을 계획적으로 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

국우의 지만원의 과대망상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각주 금요일 저녁 7~8시 (미용호는 11월 18일)

강남역 6번 출구 ABC뉴욕제과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해회역 4번 출구

종각역 4번 출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너편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앞), 풀무집(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온라인

《레프트21》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99퍼센트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월가 ‘점거하라’ 시위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99퍼센트의 저항’ 운동이 건설되고 있다. 강동훈 기자가 안지중·최영준 ‘99퍼센트 행동준비회’의 준비팀장을 만나 이 행동의 의미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었다. ‘99퍼센트 행동 준비회’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진보연대, 다함께 등이 중심이 돼 건설됐다.



안지중 99퍼센트 행동 준비회의 준비팀장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가 적극 추진되면서, 자본에 대한 모든 규제를 없애고, 그동안 유지돼 온 복지를 허물고, 금융자본과 투기자본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 대한 반발로 ‘99퍼센트 저항’ 운동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특히 이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10월 15일과 22일에 열린] 시위도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 국회 앞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국회를 점거하라’는 구호가 나왔고, 실제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국회를 점거하라’는 구호를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 국회가 1퍼센트를 위한 국회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99퍼센트의 차오르는 분노를 한미FTA 저지 투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 운동이 ‘99퍼센트 대 1퍼센트’를 제기하고 월가 ‘점거하라’ 운동처럼 어디를 점거하라는 형태로 제기된 특징은 있지만, 한국에서는 전부터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여러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등록금에 맞서는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운동이나 개방화 정책 때문에 농정이 무너지는 것에 맞선 농민 운동, 정리해고·비정규직 문제 등에 맞서는 노동자 운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는 ‘희망버스’나 반값 등록금 운동처럼 각 부문에서 벌어지는 운동들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민주노총

이 ‘99퍼센트 저항’ 운동을 함께 제기하기로 했고, 하반기 농민 집회나 민중행동에서도 이런 점들이 제기돼야 합니다. 물론 국제 공동 행동이 잡힌다면 함께해야겠지요.

일반 시민이 광범하게 참가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은 고민거리이긴 합니다.

한국에서 대중의 분노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명박 정부가 레임덕으로 가면서 지배자들의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진영이 어떻게 단결하고 힘을 모아내느냐에 따라 ‘99퍼센트의 저항’은 거대한 운동으로 폭발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조직 노동자들도 함께합시다”

최영준 99퍼센트 행동 준비회의 준비팀장

한국에서 ‘1퍼센트에 맞선 99퍼센트 행동’은 9월 중순 미국에서 시작된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월가를 점거한 시위대는 ‘왜 99퍼센트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1퍼센트의 부자들만 도와주냐고 항의하며 ‘일자리, 교육, 의료에 돈을 써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과 저항은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선 이미 2월 위스콘신주에서 반노조법에 항의해 노동자들이 주의회를 점거한 투쟁이 있었는데, 이 투쟁은 이집트 혁명과 유럽 노동자들의 파업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월가 시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진중공업과 김진숙이 그렇고, 1천만 원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 물가폭등, 전세대란, 공공



요금 인상, 부자 감세, 1퍼센트 부자만을 위한 한미FTA 추진 등이 99퍼센트에 해당하는 노동자·민중을 버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99퍼센트 저항 운동’은 한국의 고통받는 99퍼센트를 대변하는 운동이자, 경제 위기 고통선거에 맞선 세계적 저항의 일부입니다.

한국에서 10월 15일에 열린 첫 집회에는 이명박 정부가 시청광장을 봉쇄했음에도 1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2차

행동은 진보진영 전체가 한미FTA 저지로 힘을 모으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고 봅니다.

미국 월가 점거 시위도 9월 말부터 노동조합들이 참여하고, 월가를 점거한 청년들과 공통된 이익과 분노를 표현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듯이, 한국에서도 99퍼센트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힘을 가지려면 노동계급이 나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99퍼센트 행동 준비회’는 민주노총과 함께 11월 13일 ‘1퍼센트에 맞선 99퍼센트, 우리가 대안이다’를 모토로 내세운 전국노동자대회에 더 많은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이 참가할 수 있도록 호소할 것입니다.

또 11월 12일 노동자대회 전야제 때 서울 시청광장에서 3차 행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들과 함께 분노하는 99퍼센트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할 것입니다.

《레프트21》판매자 벌금형 2심 3차 재판

“1퍼센트를 위한 언론 탄압에 맞서 투쟁할 것”

지난해 5월 강남역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레프트21》을 판매하던 우리 6인을 경찰이 불법 연행했다. 이후 법원은 우리가 ‘미신고 집회’를 했으며 벌금형 총 8백만 원을 약식명령 했고, 우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금까지 1년 넘게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지방선거를 빌미로 정부 비판과 진보적 주장을 억압했다. 사실 ‘미신고 집회’는 핑계일 뿐 정부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진보적 인사와 단체들이 우리 6인의 투쟁을 지지했다.

그 덕에 1심 재판부는 5인에게 무죄, 1인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에 맞선 통쾌한 승리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우리 6인에 대해 항소했다. 우리도 선고유예를 받은 김형환 씨가 항소했다.

궁색해진 검찰

이미 1심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2심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내겠다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그러나 2심 2차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검찰은 아무 것도 내지 못했다.

대신 검찰은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다며, 법정에서 우리에게 신문 수령 절차와 대금 납부 절차 등 판매 과정을 물었다.

1심 재판에서 패배해 궁색해진 검찰이 판결을 뒤집으려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는 식으로 이미 1심에서 검증이 끝난 문제까지 물고 늘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 투쟁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여전하다.

항소심에서도 진보 인사 80여 명이 가까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진보적 단체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검열을 공개 비판했던 고려대 법대 박경신 교수의 지지 편지도 받았다.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린다. 지지와 연대에 힘을 얻어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다.

3차 재판에서 우리 6인은 최후진술을 한다. 우리는 1퍼센트를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면서 99퍼센트를 위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옹호할 것이다. 많은 분들의 방청을 바란다.

김지태 《레프트21》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

박원순의 공약 이행을 전폭 지지하며

투쟁으로 뒷받침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속한 대표 공약들을 하나둘 실행에 옮기고 있다.

취임 후 첫 결재가 무상급식 예산 승인이었다. 11월 4일에는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2천8백 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예산을 전격 반영했고, 내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지원을 위한 시 복지예산을 3천억 원 증액키로 했다. 뉴타운 사업 반대 농성 중인 주민들에게는 직접 찾아가 “용산 참사를 기억하고 있고 …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개발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산 참사 주범이며, 대출 받은 등록금

값으려고 이마트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시립대 학생의 죽음을 못 본 척한 오세훈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오세훈이 2007년 이후 서울시 소속 부서와 사업소에서 정규직화한 인원은 단 열네 명에 불과했다.

특권층 대변 정치에 대한 반감으로 박 시장에게 투표한 노동계급 청년세대는 지지자들의 요구에 충실한 박 시장의 이런 행보 덕분에 사기가 치솟고 있다. 한미FTA 저지 투쟁에 미조직 청년·청소년들의 참가가 두드러진 데서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위기감을 느낀 우파들은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박 시장을 매도하고 공격하기 바쁘다. 최근 교육부장관 이주호의 측근을 서울

시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임명한 우파들은 무상급식 예산 삭감까지 시도하고 있다.

우파의 분열

그러나 현재 우파들은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첫째,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중의 분노가 워낙 크다는 것이 확인돼 오히려 우파들이 분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근혜조차 복지를 늘리겠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 25명은 ‘성장 중심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라’며 반MB 연판장을 돌렸다.

둘째, 한미FTA 저지 투쟁이 강력하게 재점

화하면서 개혁을 방해하려는 우파에 맞설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박원순 시장도 복지 공약 추진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박 시장이 오세훈의 한강르네상스를 진두지휘했던 한강사업본부장 류경기를 서울시 대변인에 임명한 것은 아쉽다. 이런 타협은 우파가 다시 반격할 여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 이행을 전폭 지지하면서, 우파와 타협하지 말고 이 기초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을 주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파의 방해로 뚫고서 진보적 개혁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중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김문성

한미FTA 반대 투쟁 — 평가와 전망

한미FTA 반대 운동이 성장하면서 그동안 원내에서 한미FTA 반대 투쟁의 선두에 있던 민주노동당이 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동안 불필요한 타협으로 비판받던 민주당도 장외 투쟁에 나섰다. 심지어 정동영, 천정배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전면적인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반대로 한나라당은 자중지란에 빠진 듯 하다. 이명박의 레임덕은 심화하고 한나라당에서는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 비준안 처리의 1차 관문을 맡고 있는 남경필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25명이 이명박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적을 눈앞에 두고 뭐하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당대표 홍준표는 당사를 없애고 '천막 당사 정신'으로 돌아가겠다고 '쇄신' 쇼를 하고 있지만 냉소와 비아냥만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언제든 지 직권상정과 날치기를 시도할 수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핵심 기반인 재벌·부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서 불이익도 무릅쓰려는 것이다. '이왕 버린 몸이고 더 잃을 것도 없다'는 심정일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진다는 위기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교활하게도 최근까지 이명박 정부와 우파는 민주당의 약점과 모순을 파고들며, 한미FTA 비준 저지 투쟁에 균열을 일으키려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FTA, 이명박 대통령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는 TV광고가 대표적이었다. 민주당이 한미FTA를 시작했고 적극 찬성해 왔다는 것을 계속 들춰내려 한 것이다. 민주당은 실제로 여러 차례 이런 시도에 흔들려 왔다. 처음에는 '10+2 재협상'으로 그 다음에는 '미국이 비준하면', '농업 피해 대책이 포함되면', '중소기업 대책이 포함되면' 하는 식으로 하나씩 타협하더니 원내대표 김진표가 일단 협정 발효 뒤에 ISD 재협상을 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하는 일까지 벌여졌다.

민주당 김진표는 지금도 “양국 정부가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유지 여부



11월 5일 대한문 앞을 가득 메운 한미FTA 반대 촛불 “이명박의 FTA를 반대하려면 먼저 노무현의 FTA를 넘어서야 한다”

에 대해 지체없이 협의한다는 약속만 하면 저지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물론 현재 최대 쟁점인 ISD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조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 정도로 독소조항이다. 그러나 ISD를 포함한 독소조항들은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체결할 당시에도 이미 포함돼 있었다.

따라서 노무현의 한미FTA는 ‘진품’이고 이명박의 한미FTA는 ‘짝퉁’이라는 민주당 등의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그보다는 “이명박의 FTA를 반대하려면 먼저 노무현의 FTA를 넘어서야 한다” (이정환 기자, <미디어오늘>)는 지적이 더 타당하다.

분노와 열기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지금 한국의 기업주, 부자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한미FTA 체결에 더욱 목을 매고 있는데, 재정과 인력을 이들에게 의존

하는 민주당은 이것을 간단히 무시할 수 없다. 민주당이 거듭 동요해 온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과정은 민주당에만 의존해서는 한미FTA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줬다.

반면, 한미FTA 반대 운동 진영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한미FTA ‘폐기’를 요구해 왔다. 2006년부터 수만 명이 몇 달 동안 시청 광장과 도심 곳곳에서 반대 시위를 벌였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2007년에 파업을 하기도 했다. 4년 넘게 비준을 막아 온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런 힘이 약화되면서 한미FTA 반대 운동이 최근까지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민주노동당 지도자 등이 민주당과의 무비판적인 동맹에 치중한 것도 하나의 요소였다. 한미FTA 폐기 요구를 민주당의 요

구인 ‘재협상’으로 후퇴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후퇴는 한미FTA 반대 운동이 민주당만 쳐다보게 만들면서 기층의 사기를 꺾어먹는 효과를 냈다. 그래서 민주당이 동요할 때 우리 쪽도 흔들리게 된 것이다.

다행히 최근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면서 기층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다시 투쟁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도 앞장서서 거리의 투쟁을 고무하고 있다. 반한나라당·비민주당 정서가 확인되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민주당도 한미FTA 비준 저지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로 몰렸다.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해 촛불을 든 수많은 사람들이 2008년 촛불을 떠올리며 고무되고 있다. SNS에서 확인되는 분노와 열기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 모든 과정은 한미FTA 반대 운동이 어디

에 강조점을 뒤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나라당이 과연 한미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 할 수 있을지 정확히 예단할 수는 없다. 이명박의 레임덕이 워낙 심각하고 한미FTA 반대 운동의 사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비준안 처리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그렇다 해도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 비준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미FTA 반대 운동 진영은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민주당이 동요할 때 비판을 삼가지 않으며 기층의 투쟁을 계속 건설해 나가야 한다.

1퍼센트만을 위해 99퍼센트를 희생시키려 하는 한미FTA는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

장호중

한미FTA 반대 주장들은

‘괴담’이 아니라 진실이다

정부와 조중동은 근거 없는 ‘괴담’이 한미FTA 반대 여론을 조작한다고 비난한다. 한미FTA 반대 운동의 주도자들을 음모꾼처럼 보이게 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정보 판단력을 깔보면서 반대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곰수다’.

이명박은 3년 전 광우병 촛불운동 때도 똑같은 공격을 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MBC <PD수첩>을 괴담 진원지로 꼽아 기소했으나 결국 <PD수첩>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람들이 정부의 공식 해명을 믿지 않는 까닭은 정부뿐 아니라 기성 언론들도 진실을 말한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2000년 볼리비아에서 물 사유화 때문에 수도세가 올라 대신 빗물을 받아 썼다’는 내용이 괴담이라고 소개했다. 볼리비아는 FTA를 맺은 적도 없으니 관련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는 구제금융 조건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했고, 코차밤바 주의 물 공급권을 넘겨 받은 벡텔은 물값을 세 배나 올렸다. 이 때문에 도시 빈민들이 빗물을 받아먹었는데, 벡텔이 이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게 했다. 이때 벡텔의 협박 무기가 바로 ISD였다. 결국



한미FTA는 공공 복리를 위한 기업규제를 투자의 걸림돌로 여긴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오히려 벡텔이 쫓겨났다.

따라서 문제는 볼리비아가 미국과 FTA를 맺었냐 아니냐가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 ISD 같은 것이 얼마나 나쁜가다. FTA를 맺지 않고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또 외교통상부는 의료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라 의료비 상승 걱정이 ‘괴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허가·특허 연계

제도’란 조항에 의거해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특허를 연장하고 값싼 복제약 시판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조처들은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켜 의료보험 재정을 위협할 것이다. 또 한미FTA는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막지 못하게 해 놓았다.

의료민영화

<조선일보>는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에 권한이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도 괴담’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미FTA는 서비스 산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도록 해, 사실상 공공서비스 영역에도 국내의 기업들이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을 통한 투자자(기업)에게는 공공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으니, 미국이든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한 한국의 재벌들이든 이들에게 노동·환경 규제, 세금 등을 함부로 부과할 수 없다.

이처럼 한미FTA는 공공 복리를 위한 기업 규제를 ‘비관세장벽’이라 부르며 제거해야 할 투자의 걸림돌로 여긴다. 한미FTA를 위한 선결 과제로 자동차 배기량 규제 제도를 없애고, 광우병 위협에 대한 식품 안전성 검증을 포기한



것 자체가 한미FTA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저들의 거짓말을 보고 있다면 환상의 섬으로 데려간다면 복제인간들을 속이는 영화 <아일랜드>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한미FTA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암울한 미래를 장밋빛으로 윤색하는 정부와 조중동이야말로 진정한 괴담 유포자들이다.

김문성

한미FTA를 막아야 하는 열두 가지 이유

이 글은 최근 우석균·송기호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이 쓴 글로 한미FTA의 문제점을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한미FTA는 1퍼센트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가 도입돼 기업의 탐욕을 막을 공공정책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공기업 민영화로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을 폭등시키는 협정입니다. 물가가 폭등해도 민영화된 기업을 다시는 공기업화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규제완화가 된 제도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협정입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한미FTA 위반이 되며 한국의 농업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대기업과 한국의 재벌만을 위한, 1퍼센트만을 위한 협정인 것입니다.

1. 약값 폭등, 의료비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망칩니다.

한미FTA는 특허를 연장시켜 값싼 복제약품이 시판되는 것을 대폭 늦춥니다(허가-특허 연계). 또한 지금까지 한국의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결정하던 약값을 다국적 제약회사가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독립적 검토기구). 환자들의 약값이 폭등하고 건강보험재정이 문제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미FTA가 비준되면 전국 20개 도시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허용 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영리병원의 의료비는 지금의 비영리병원보다 크게 올라갑니다. 의료비도 폭등합니다.

2.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이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의 대상이 돼 위태로워집니다.

공공정책은 한미FTA의 예외라구요? 아닙니다. 한미FTA에서는 일단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기구에 회부하면 한국 정부는 꼼짝없이 끌려나가서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동의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지정해 환경폐기물을 못 버리게 하자 캐나다 정부가 회부했습니다.

중소기업적합협정제도나 협동조합육성제도도 한미FTA 위반으로 강제 중재에 회부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당연지정제에 해당하는, 캐나다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무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한 연방보건법도 영리병원에 손해가 된다고 중재에 회부했습니다.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는 보편적 규범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상(DDA)에서도 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가 FTA에 포함되면 한국 정부는 중재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역 보복을 당합니다. 기업에 대해 공익을 목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기업들에게는 천국이지만 한국 정부의 정책결정권은 크게 훼손됩니다.

3. 민영화를 저지 못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물가가 오릅니다.

볼리비아에서는 1999년 코차밤바시의 상수도가 민영화한 후 최저임금이



10월 28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 결의대회 촛불을 부활시켜 한미FTA 저지하자.

60달러인 나라에서 한 달 수도요금이 20달러가 될 정도까지 폭등했습니다. 코차밤바 주민들은 혹시 아이들이 수도꼭지를 틀까 봐 수도를 새끼줄로 묶고 빗물을 받아먹었습니다. 민영화 당사자인 베텔은 빗물도 자기 것이라며 이를 금지하고 단속까지 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이 와중에도 상수도를 다시 국유화하려 하지 않았는데,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에 회부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제 철도도, 가스도 민영화한다고 합니다. 철도요금과 가스요금이 폭등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비준되면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ISD) 때문에 다시 이를 국유화하기 힘듭니다. 또 역진방지조항(래치) 때문에 한번 민영화하면 요금이 아무리 올라도 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고물가로 서민생활은 파탄지경인데 수도, 전기, 철도, 가스 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4. 동네 통닭집, 피자집, 상점, 정육점, 채소가게가 어렵게 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서면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동네 일반상점은 물론이고 정육점, 채소가게까지 문을 닫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통큰 통닭', '통큰 피자'니 뭐니 해서 일단 값싸게 팔기 시작하면 주변의 동네 통닭집, 피자집은 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는 한EU FTA 때문에 현재도 어



려워졌지만 한미FTA가 되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한미FTA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일 자리를 잃거나 명퇴를 당하면 기발 곳은 동네상점이나 통닭집인데 이제 서민들의 피난처까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합작 운영하는 다국적기업과 재벌은 폐돈을 벌겠지만 서민들은 죽어 나가야 합니다. 한미FTA가 말하는 '경쟁력 강화'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5. 외환 위기 닥쳐도 외환통제가 곤란합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일시적 외환 송금제한(금융세이프가드)입니다. 그런데 한미FTA에서는 이 금융세이프가드의 전제조건을 미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한미FTA가 비준되면 금융 위기가 닥쳐도 외환 통제 조치를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미FTA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개방했습니다(네가티브리스트). 금융상품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2008년 경제 위기를 불러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권이 제약을 받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시기에 한국은 국제 투기자본의 농간에 대해 제대로 규제도 못 하고 가만히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6. 무역 흑자가 줄고 적자가 됩니다.

한EU FTA 후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해 대비 37억 불이나 무역흑자가 줄었습니다. 한미FTA를 하면 수출이 늘어난다구요? 미국은 지금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집을 잃고 거리에 쫓겨난 사람이 수백만 명이 넘고 실업률이 10퍼센트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미국에 무슨 물건을 더 팔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FTA를 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

화리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후 미국 무역흑자는 늘어났지만 미국의 일자리는 70만 개가 줄었습니다.

멕시코는 어땠습니까? 1993년 멕시코 정부는 NAFTA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NAFTA 체결 후 물론 멕시코의 수출액은 늘었습니다. 그러나 서민경제는 나빠지고 양극화가 심해져 멕시코 4천만 경제활동인구 중 정규직은 1천3백만 명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재벌들은 돈을 벌지만 직장인들과 서민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것이 FTA입니다.

7. 농업이 없는 한국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미국과 EU의 농산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값이 쌉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와 EU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업보조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거대 농업기업에 주는 농업보조금은 연간 2백20억 달러(약 24조 9천억 원)로 우리 나라와 비교가 안 되게 많습니다. 농업생산액에 비한 농업보조금 비율은 EU는 22.3퍼센트, 미국은 14.6퍼센트인데 우리 나라는 4.6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막대한 정부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춘 미국과 유럽의 농산물은 쌀 수밖에 없고 경쟁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관세까지 낮추는 협정이 한미FTA입니다. 한국의 농업은 끝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지금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28퍼센트밖에 안 되고 쌀을 빼면 5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세계 식량 위기가 닥치고 있고 농업이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각국이 자국 농업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업 없는 한국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8. 환경을 파괴하는 협정입니다.

한미FTA 체결을 위해 미국이 내건 4대 선결조건 중 하나가 자동차 배기량이 많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배기가스가

많은 자동차에게 세금을 부과해 환경을 지키는 정책이 사라졌습니다. 기후온난화라는 지구적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 한미FTA 협정입니다.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환경정책은 ISD 예외라지만, 사실상 한미FTA가 비준되면 한국의 환경규제조치는 단지 무역장벽으로 취급될 뿐입니다.

9.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 102조를 보면 협정과 미국 법령이 충돌할 경우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미FTA 협정이 한국법에 우선하게 됩니다. 한미FTA는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국내법입니다. 미국의 이행법에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FTA 위반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할 수 없게 했습니다.

10.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편입돼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한미FTA 협정은 단지 경제협정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정치적·군사적으로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협정입니다. 지금 동북아시아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맞닥뜨리고 있는 곳이고 앞으로 갈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정치적·군사적 한미동맹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무비판적 한미동맹 강화는 위험하며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에 해가 됩니다.

11. 1퍼센트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미국의 기업만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협회인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 재벌들은 한미FTA 지지 광고로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의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면 미국의 기업들과 합작해 한국 재벌들도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미국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도 민영 의료보험 장사로 큰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과 직장인들에게 무엇이 돌아올까요? 가스, 전기, 철도 요금 같은 공공요금이 오릅니다. 약값, 의료비가 올라 건강보험마저 위험합니다. 동네상점을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친환경무상급식도 못 하게 됩니다.

한미FTA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1퍼센트는 이익을 보지만 99퍼센트에게는 재앙인 협정입니다.

12. 99퍼센트의 힘으로 한미FTA 협정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FTA를 밀어붙이면 다른 나라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남미) 전 지역을 대상으로 FTA를 추진했습니다(FTAA). 그러나 남미 민중이 반대해 이 FTA는 폐기됐습니다.

미국이 추진한 FTA, 중동·아프리카·아시아 모든 지역에서 폐기되고 단 한 나라 즉 한국만 FTA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도 국민들이 촛불항쟁을 통해 결국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아냈습니다.

온 국민이 반대한다면 미국과의 FTA를 막을 수 있습니다. 99퍼센트의 힘으로 1퍼센트만을 위한 한미FTA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10·26 재보선 이후

‘1퍼센트 대변세력’들의 몰락이 기회를 낳고 있다

10·26 재보선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참패이자, “벡타이를 매고 힘을 신은 채 투표소로 뛰어간 노동자들의 승리”(민주노총)였다. (자세한 선거 평가는 온라인 기사 ‘1퍼센트 대변세력의 끝 좋은 참패를 보시오’)

‘대선 전초전인 이번 선거는 집권당의 몰락에 대못을 박았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깊은 암연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 정치의 중심인 서울지역에서 한나라당은 강남3구 말고는 믿을 곳이 없어 보인다.

집권당의 위기가 이토록 심각한 상황에서, 이미 사분오열된 한나라당의 내분은 더 격화하고 있다. ‘친이계’는 이미 공중분해된 듯하고, ‘소장파’, ‘친박계’ 등도 저마다 썩신을 내세우며 물어뜯고 있다.

“이 대통령의 탈당과 함께 … 어떤 식으로든 당을 ‘박근혜 중심 체제’로 전환해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애기(〈중앙일보〉)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대통령에 대한 집권당의 탈당 요구는 노무현 때보다 훨씬 이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은 “국정 기조에 변함없다”며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더욱 밀어붙이려 한다. 촛불시위 당시 ‘명박산성’을 쌓은 어청수를 경호실장으로 임명하고 한미FTA를 밀어붙이면서 아무리 고립되고 공격받더라도 친기업·반민주 정책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을 구해 낼 유일한 구원자이던 박근혜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번에 수도권에서 박근혜의 총력 지원은 안철수의 편지 한 장보다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다른 대안도 딱히 없는 우파들은 박근혜만 쳐다보고 있지만 박근혜는 총대 매길 거부하고 있다. 난파선의 선장이 되는



분노의 계절 노동계급 청년세대가 1퍼센트 대변 세력에게 계급 투표로 굴욕을 준 뒤, 우리 편 사기가 오르고 있다.

건 자살행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가 난파선에서 도망치며 이명박을 정면으로 부정하다간 ‘집토끼’마저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집토끼들만 너무 의식하면 반한나라당 정서에 반한다. 이런 진퇴양난의 딜레마는 박근혜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다.

현재 박근혜는 ‘고용 확대’와 심지어 ‘복지 없는 성장도 없다’는 말까지 하며 ‘2040세대’에게 다가가려 하고 있지만, ‘독재 계승 수첩공주’를 멘토로 받아들일 청년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편, 민주당도 위기다.

사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반이명박 반사이익을 간간이 얻어 왔을 뿐이다.

가령, 민주당이 승리한 지난해 6·2 지방선거는 천안함 사건을 이용한 우파의 북풍몰이가 오히려 역풍을 부른 사례다.

하지만 끝이 7월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다시 패배했다.

이번 선거 역시 제3의 후보가 있다면 얼마든지 민주당은 밀려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민주당 집권 10년의 어두운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 불신은 이명박 4년 동안의 실적을 통해서도 별로 해소되지 못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미FTA 문제에서도 민주당은 “아침에는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저녁에는 한나라당과 야합”(민주노동당 논평)해 온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이 이토록 끊임없이 동요하는 이유는 특권층과 기업주들에 기반을 둔 정당의 한계 때문이다. 반이명박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왼쪽의 눈치를 보지만, 자신의 계급기반을 고려하면 일관되게 원

쪽으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다.

진보진영 내 주요 개혁주의자들은 그동안 야권연대를 무비판적으로 당연시해 왔는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주당·참여당의 초라한 처지는 이런 믿음의 근거가 허약함을 보여 준다. 노동자·청년이 계급적으로 각성할수록 민주당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다.

2008년처럼

지금 민주당 왼쪽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은 안철수와 박원순이다.

둘은 기성 정치인과 차별성있는 이미지로 젊은 세대에게 멘토로 다가가고 있다. 박원순은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기도 하다. 20~30대의 80퍼센트 이상이 ‘우릴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고 보는 상황에서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뛰어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진보나 보수가 아니라 상식’이라는 안철수의 태도는 결국 모순과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박원순 시장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아쉽게도 한미FTA 반대 운동, ‘99퍼센트 저항’ 등과 거리를 둔 게 사실이다. 다행히 운동의 압력 덕분에 최근 박원순 시장은 한미FTA 일부 조항들에 비판적인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것은 진보의과제가무엇인지보여준다.

진보세력은 박원순 시장의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지지하고 안철수·박원순 지지 청년 세대와 접점을 만들면서도 실천 속에서 더 급진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재보선 결과는 사람들의 자신감과 사기를 북돋았다. FTA 반대 집회에서 2008년 촛불시위 분위기가 물론 풍기는 상황이다. 이 분위기를 바탕으로 더 강력한 투쟁을 건설해 나가자.

최미진

안철수 바람 속에 진보정치의 나아갈 길

김문성

10·26 재보선에서 진보정당은 위기와 가능성을 모두 보여 줬다.

우선 진보정당과 후보들은 무대 위에서 별로 시선을 끌지 못했다.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 경선에서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가 얻은 표는 2퍼센트 남짓이었다. 야권연대를 위해 ‘여차피 사퇴할 후보’라며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

심지어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조차 최규엽 후보 선거운동이 아니라 당선이 유력한 박원순 후보와 선을 대고 약속을 받아 내기 바빴다.

진보의 독자성을 훼손해서라도 의회에 진출하는 게 실질적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해 온 게 민주노동당 지도부였으니 누굴 탓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막상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거둔 성적을 보면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민주당과 단일화하지 않고 출마한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11~27퍼센트를 득표한 것이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노원구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당선됐다.

반MB ‘계급’투표를 한 노동계급 청년 세대가 민주당을 마뜩잖게 여기고 있으며 이들 중 의미있는 수가 진보정당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만약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통합이 성공했다면 이 가능성은 더 커졌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당권과 지도부가 강령까지 후퇴시

키며 친자본주의적인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추진하다가 진보대통합을 망쳐 버렸다. 그 결과 반한나라·비민주당 정서의 주도권을 안철수·박원순 등에게 내주게 된 것이다.

노동자·청년 들이 계급적 각성을 하며 진보를 갈망하기 시작하는데, 노동자 진보정당의 존재감은 약해지는 역설을 자초한 것이다. 진보정당 지도자들의 빼아픈 패착이 아닐 수 없다.

계급적 분노

한편 민주노동당 당권과 지도부가 그토록 그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던 유시민과 참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매우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참여당이 여전히 구 집권세력인 민주당의 아류로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의 분열까지 조장하면서 참여당과 통합하려 한 민주노동당 당권과 지도부의 정당성은 더욱 약화됐다.

그런데도 민주노동당 당권과 지도자들은 또다시 진보신당을 탈당한 새진보 통합연대에게 참여당과의 ‘원샷 통합’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새진보 통합연대 측은 일각에서 이런 압박에 타협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는 듯하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의 아류로 비치는 참여당과의 통합 시도는 반한나라·비민주당 정서

를 진보정당이 흡수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고, 민주노총에서 불필요한 분열을 재연할 것이다.

이는 지지자들에게 냉소와 환멸을 일으킬 것이고, 결국 진보정당의 정치적 존재감은 더 약화될 수 있다. 그리 되면 ‘혁신과 통합’ 등 NGO 성향 인사들이 주도하는 야권통합 정당에 진보정당들이 들어오라는 압력이 커질 것이다.

참여당과의 통합을 고집하면 일관되게 이 압력을 거스르기도 힘들다. 참여당은 진보정당과 ‘소통합’ 이후에 ‘혁신과 통합’과 함께 야권대통합으로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당과의 통합이든 야권통

‘나꼼수’ 현상

반보수·반특권층 정서와 접속하기

정치풍자 인터넷 라디오 방송인 〈나는 꼼수다〉 열풍이 거세다.

인터넷 다운로드 수는 이미 국내 1위를 넘어섰고 진행자인 김어준의 저서 《닥치고 정치》는 종합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이 방송의 매력은 기성 언론이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와 ‘1퍼센트’ 특권층의 기득권 지키기 ‘꼼수’에 대한 ‘꼼꼼한’ 폭로와 신랄한 야유다.

〈나꼼수〉는 이명박의 BBK 의혹 총정리로 첫 회를 시작했다. 한국 특권층은

머릿속에 ‘자기 먹을 것’밖에 없는 “순결한 동물”이고 그 점에서 이명박은 “뇌가 완전 청순”하다고 야유한다.

이런 속 시원한 폭로는 특권층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과 반민주 행태에 질린 노동계급 청년세대의 불만과 반보수 정서에 부합한다. “쫄지 말자”는 외침은 위안이 될 만도 하다.

김어준은 이명박이 “국가를 수익모델로 삼는다”고 비판하는데, 이런 비판은 국가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투표로 나쁜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개혁

주의적 각성과 맞아 떨어진다.

문제는 대안이다. 김어준은 민주당이 “욕심만 많고 … 멍청한 큰 형”이라면서도 진보정당이 “민주당을 포함한 보수와 자기들을 분리해 내겠다는 나홀로 전략”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대중은] 진보, 보수도 햇갈리고 … 신자유주의가 뭔지도 아직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엘리트적 관점에서 김어준은 문재인에게서 희망을 찾는다. ‘개혁적’ 엘리트가 주도하는 범야권통합이 정권교체의 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노 정권의 실패”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중 하나”(강준만)다.

그래서 최근 〈나꼼수〉에 출연한 도올 김용옥이 민주당과 진노 정치인들을 겨냥해 “영풍하게 타협[해] … 진보라는 가치를 망쳐” 버렸다고 직설로 비판했을 때 진행자들은 아무 반박도 못 했다.

진보정치 세력은 〈나꼼수〉에 호응하는 노동계급 청년세대의 불만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제안하고, 그 안에서 급진적 대안을 토론해야 한다.

정성진 칼럼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되찾으려면

정성진 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마르크스주의 연구》편집위원장 /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책갈피)의 공저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것은 기쁜 일이다. 하지만 안철수·나꼼수·박원순 바람 속에 진보정당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게 된 것은 우려스럽다. 물론 진보정당의 주변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다.

예컨대 민주노동당의 정당 지지율은 2004년 총선 직후 15퍼센트대까지 치솟았지만, 1년도 안 돼 10퍼센트 이하로 하락했고, 2008년 분당 이후 5퍼센트 밑으로 주저앉았으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 전후해서는 다시 2퍼센트대로 내려갔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주객관적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신자유주의 MB 정권의 대두, 세계 대공황 도래 등의 정세가 반신자유주의·반자본주의 진보진영의 성장에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주체적 요인의 문제가 더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그중에서도 중요한 요인은 2008년 진보정당의 분열, 즉 민주노동당의 분당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2008년 민주노동당의 분당을 회고하면서, 현재 진보정당이 직면한 곤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것이다.

2008년 민주노동당의 분당을 주도했던 평등파와 진보신당 계열 눈자들은 진보정당의 위기, 혹은 주변화는 민주노동당 당권파인 자주파의 '중복주의', '패권주의', '우파적'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 2008년 총선에서 분열해 경쟁한 두 진보정당은 모두 부진했지만, 양당 간의 경쟁에서 패자는 2008년 분당 이후 '중복'과 일색으로 돼 버린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 '스타'의 원들과 홍세화 등 진보 지식인·교수들이 대거 합류했던 진보신당이었다.

'중복주의',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주파의 민족주의적 스탈린주의는 혐오와 결별, 척결의 대상이 아니라 그 역사적 존재 이유의 이해에 근거한 비판의 대상이어야 한다. 또 '패권주의'가 다수파의 당권 독식 논리를 뜻한다면, 자주파 뿐만 아니라 분당 전 평등파들도 '패권주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다



이렇게 잡은 손들이 참여당 때문에 갈라진 틈에 안철수·'나꼼수' 바람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

수파의 헤게모니 행사 자체가 당내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08년 1월 당대회에서 평등파의 심상정 비대위가 일심회의 제명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이 안이 압도적 다수로 부결되자 이를 이유로 탈당한 것이야말로, 당내에서 다양한 복수의 경쟁적 이념 혹은 신념의 물리적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당내 민주주의 원칙을 거부한 행태였다.

또 '자주파=우파, 평등파(분당파)=좌파'라는 이분법 역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예컨대 비정규직을 용인하는 비정규직 입법이나 노동자가 먼저 자본가에게 양보해 개혁을 끌어내자는 사회연대전략과 같은 '우파적' 사회민주주의 정책들을 주도했던 것은 평등파였다. 반면, 한미FTA 반대 투쟁 등 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을 전투적으로 조직했던 것은 자주파였다.

2008년 분당파들이 주장했던 자주파의 '중복주의', '패권주의', '우파적' 정책 등의 문제는 분당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였을 뿐이다. 분당이 진보신당 눈자인 자주파가 평등파를 쫓아낸 결과가 아니라 정반대로 평등파가 적극적으로 기획 추진했던 프로젝트였음은, 최근 김윤철, 정영태 교수 등 평등파 자신들의 학술적 논저에서 입

증·인정되고 있다.

2008년 분당은 진보정당의 분열과 이들 간의 대립 투쟁을 격화시켰다. 분열 전에는 민주노동당의 틀 안에서 경쟁했던 자주파와 평등파가 이제 당을 달리 하게 되면서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대립·투쟁하게 됐으며, 이와 연동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직 노동계급까지 분열됐다.

또, 평등파들이 창당한 진보신당은 강령에서 자주파의 '중복주의'를 비판하는 것 말고는, 민주노동당의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구별되는 좌파적 사회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지 못했다. 진보신당은 적록연대, 사회연대, 당의 다양성과 개방성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지만, 전체적으로는 반자본주의 급진좌파 정당이라기보다 또 다른 사회민주주의 개혁 정당에 가까웠다.

진보신당은 이른바 '좌파의 재구성'을 제창했지만, 민주노동당 외곽에 있던 급진좌파, 혁명좌파 정치조직들을 당내에 끌어들이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분당 이후 각종 선거에서 진보신당과 경쟁 대립하는 과정에서 당권파들의 좌파 민족주의적 경향은 다소 억제된 반면 사회민주주의적·개혁주의적 경향은 더 강화됐다.

민주노동당 당권파가 현재 국민참

여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포함한 민주대연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 지난번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강령을 삭제하고 이를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으로 대체한 것 등은 2008년 분당 이후 민주노동당에서 우경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요컨대 2008년 민주노동당의 분당은 우경적 분열이었으며, 평등파의 탈당과 진보신당 창당은 이명박 정권 출범 국면에서 진보정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전체의 분열, 조직 노동계급의 분열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한국 진보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후퇴였다.

반자본주의 급진좌파

이 때문에 2008년 민주노동당을 탈당해서 진보신당으로 넘어갔던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의원 등과 진보적 지식인 교수들이 최근 '진보대통합'을 추진·지지하고 있는 것은, 그 중요한 문제점과 최근의 좌절이 있었지만 2008년 분열의 역사적 과오를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어떤 형식이 되든 진보진영의 단결은 최근 안철수·나꼼수·박원순 바람 속에 더욱 회복해지고 있는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다시 찾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최근 진보

대통합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진보진영 단결이라는 과제 자체를 포기하고 최근 진보신당 독자파의 시도에서 보듯이 '각자도생'으로 나아갈 경우 진보진영은 더욱 주변화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진보대통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주로 그 방식 때문이다. 즉 그동안 진보대통합 정당 건설을 공동전선 형태로가 아니라 독자적이고 일관된 정당 건설 방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진보대통합 정당을 강령적으로 완결된 정당으로 건설하려 할 경우, 통합되는 정당들의 상이하며 상충되는 이념과 강령들을 하나의 단일한 이념과 강령으로 통합·조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조정은 상충되는 이념과 강령들이 그들의 최대공약수로 축소될 경우에만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우며, 설사 성공하여 통합정당이 출현한다 할지라도 그 통합정당은 통합 이전에 비해 정치적으로 우경화된 정당일 것이다. 실제로 2011년 8월 새 통주가 잠정 합의한 강령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강령에 공통되는 부분들을 모은 것에 그칠 뿐이며 반자본주의 급진좌파 정당의 강령으로는 미흡하다.

게다가 그 간의 진보대통합 논의 구도는 민주노동당 당권파와 진보신당 통합파와 민주노총 상근간부들 간의 협상으로 제한돼, 이들 외부에 존재하는 다른 급진좌파 정치조직들이 소외됐다. 그 결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과정은 뒷전으로 밀려 나고, 선거주의가 특권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고려할 때 기존의 급진좌파 정당들의 이념과 강령, 조직을 유지 존중하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공동요구들을 중심으로 선거 투쟁과 대중 투쟁을 포함한 공동 활동을 수행하는 공동전선 형태로당을 건설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공동전선 형태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물론, 기타 외부의 급진좌파 정치조직들까지 포괄해 기존의 진보정당들을 재구성하는 것, 즉 진보대연합을 건설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진보대통합의 존재 형태일 것이다.

기고 | 자본주의와 노동자 건강

착취 체제야말로 1급 발암물질이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 등으로 전면적으로 제기됐던 '야간노동 철폐' 구호가 다소 잦아든 것 같아 안타깝다. 야간노동 철폐 투쟁은 노동자 건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은 경제 위기라고 해서 주춤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착취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평등을 양산하며 소외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폐절돼야 할 것이지만, 말 그대로 노동자의 몸을 갉아먹는다는 점에서도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노동자가 생산을 위해 투여한 노동시간에 비해 임금의 적을 때 착취가 발생한다. 자본주의 태동 이래로 자본가는 이를 위해 몇 가지 방식을 개발했고, 그 모든 과정은 노동자 건강을 파괴한다.

첫째, 가장 흔한 착취의 방식은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자본은 잠이 없다. 휴식도 없다. 매순간 총혈된 눈으로 상상의 피

를 찾아 헤매는 흡혈귀처럼 자본은 가능한 최대로 노동시간을 늘려 자본을 확장하려 한다.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야 하고, 매장은 불야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심야 노동이 없어지지 않고, 장시간 노동도 사라지지 않는다.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한국의 경제 성장은 온전히 이러한 방식에 의존해 왔다.

둘째, 노동강도를 늘리는 것이다. 노동자 1인이 1시간에 10개를 생산하던 것을 1시간에 15개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 노동자가 정해진 시간 동안 해야 할 노동의 밀도 혹은 강도가 강해지게 된다.

그런데 대표적인 착취 방식 두 가지 모두 노동자의 건강을 해친다.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이 노동자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거나, 밤에 일하게 되면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된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대사성 질환 혹은 이

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게 첫 번째고, 그것이 관리되지 않으면 심장병에 걸리거나 중풍에 걸려 사망하게 된다. 충분히 자지 못하거나 잠의 주기가 변경되면 사고가 날 확률도 증가한다.

위장병,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성은 조산, 자연유산, 저체중아 출산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야간 노동은 암 발생도 증가시킨다고 하니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피해의 목록은 끝이 없다.

노동 강도 강화가 다양한 건강 문제를 낳는다는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 노동 강도 강화는 흔히 '골병'이라고 불리는 근골격계질환,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뿐 아니라 직장 내 폭력이나 왕따 같은 폭력과 갈등도 높인다.

석면과 야간 노동

부가적으로 동원되는 방식 역시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한다.

상용직에 비해 일용직, 파견직, 임시직, 시간제 등 비상용직의 직업성 사고 발생 비율이 높다. 원청에 비해 하청 노동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고 있는 터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비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노동자에 비해 더 오래 일하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더 위험하고 해로운 일을 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노동을 감시, 통제하는 방법도 고도로 발전하고 있다. 노동의 질 관리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공공연하게 침해 되고 있다. 이러한 감시와 통제 신기술의 도입도 노동자 건강을 해친다. 감시받는 노동자는 불안증, 우울증이 증가하고 스트레스성 질환도 잘 걸린다.

착취가 정의롭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 하면서 일 때문에 죽거나 다친다는 것 역시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장시간 노동이나 야간 노동, 노동 강도 강화가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 가고, 노동자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자본주의 태동 이래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석면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암을 일으켜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것만큼 확실하다.

그런데 왜 석면은 생산·유통을 금지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야간 노동, 과밀한 노동은 금지하지 않는가? 자본가와 국가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제는 투쟁이다. 더 많은 노동자 투쟁, 더 강한 노동자 투쟁이 없는 한 윤리적 차원에서, 혹은 '정의론' 차원에서 착취의 방식을 포기할 자본가와 자본주의 국가는 없다.

경제 위기 시에는 일자리도 줄어들고 생산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 인상 투쟁은 물론이거니와 노동시간 단축 투쟁, 야간노동 철폐 투쟁은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핑계로 노동자 건강 파괴의 불의에 눈감는 것이다. 착취 철폐와 노동자 건강 쟁취를 위한 투쟁에 경제 위기가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위기는 저들의 위기일 뿐이다.



11월 2일 미국 오를랜드 노동자들이 '점거하라' 운동에 연대해 역사적인 파업을 벌였다.

다른 세상을 꿈꾸는 월가 '점거하라' 운동

월가 점거 운동은 전 세계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아닌디아 바타차리아**(영국의 사회주의자)는 이 운동이 어떻게 조직되고 있고, 그것이 이 운동의 정치에 관해 무엇을 말해 주는지 분석한다.

주코티 공원은 맨하탄 부동산 업계에서도 가장 값비싼 곳으로 손꼽힌다. 황당하리만치 부족한 상상력 덕분에 이곳의 이름은 공원을 소유한 기업 회장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그러나 고작 한 달 사이에 이곳은 새로운 이름 — '자유 공원' — 으로 더 유명해졌다.

이곳의 새 이름은 공원의 현 거주자들 —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 참가자들 — 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다. 그것은 은행, 기업 탐욕, 경제적 불의에 반대하는 급진적 저항 운동이다.

'점거하라' 운동은 평범한 미국인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고 미국 좌파에게 엄청난 활력을 줬다. 미국 전역 수백 곳에서 비슷한 점거가 나타났다.

'점거하라' 운동 참가자인 고등학생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버락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미국인이 지금 루이스와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과 함께 많은 사람이 실업, 주택 강제 몰수, 부채로 고통받았다. 그러나 부자들은 '과보호'를 받았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분노했고 월가 점거 운동이라는 불꽃이 미국 전역을 휩쓸는 불길로 확산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시위 참가자와 지지자 들은 시위대를 금융가에서 몰아내려는 뉴욕 시장 마이클 블룸버그의 시도를 번번히 무산시켰다. 그들은 대량 체포를 자행하는 경찰의 반복적 공격을 견디며 공원을 사수했다.

주코티 공원 광장은 손수 제작한 팻말을 든 시위 참가자들로 둘러싸여 있다. 일부 참가자들은 자유지상주의적(국가 개입에 반대하는 정치 조류)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헌법과 다양한 애국주의적 상징들을 인용한다. 이것은 미국 포퓰리스트 정치의 단골 손님들이다.

그러나 이 경향이 '점거하라' 운동에서 특별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광장으로 좀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좀더 급진적인 정치 경

향들을 볼 수 있다.

자유 광장은 크게 보아 기능별 — 도서관, 스페인어 정보 마당, 노조 조합원 코너, 언론 지원 코너, 주방, 의료 지원 텐트 등 — 로 분할돼 있다. 광장의 전반적 분위기는 바쁘면서도 차분하다. 버튼을 착용한 자원봉사자들은 이 운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우려고 바빠 움직인다.

급진적

운동 참가자들은 매우 젊다. 광장의 시위대와 광장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다. 오늘날 미국 좌파의 근간을 구성하는 흰머리의 '베이비 부머' 세대 사람들 — 이들은 1960대와 1970년대 공민권 운동과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에 참가하며 급진화했다 — 도 보이지만 이들은 소수다. 신세대가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점거하라' 운동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젊은 운동이다. 이 운동의 정치는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아나키스트, 여성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운동 내에서 서로 충돌하고 결합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견해의 사람들은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할 말은 반드시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단결했다.

이 운동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아직 소수라는 점을 잘 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대다수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다가 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런 의무감은 이 운동의 대표적 구호인 '우리는 99퍼센트다'에 잘 나타나 있다.

'진출'을 강조하는 것은 특히 두 집단을 고려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다. 광장에서는 노조 티셔츠를 입은 노동자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점거하라' 운동의 '노동 진출 위원회'에는 전통적인 노조 활동가들과 함께 투쟁을 벌이는 사회주의자와 급진적 조합원들이 관여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를 낳았다. 하나는 노조에 가입한 노동계급이 '점거하라' 운동에 연대를 보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계급이 좀더 급진적 전술을 사용하도록 자극을 준 것이다.

블룸버그 시장이 '환경 미화' 명목으로 '점거하라' 운동 참가자들을 광장에서 내쫓으려고 했을 때 노조들은 조합원들에게 출근길에 광장에 들러 운동에 대한 연대를 보여 주자고 호소했다. 그날 아침 2천 명이 광장을 둘러싸고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월가 점거 참가자와 노동자 사이의 연결은 이런 전술적 측면에만 한정돼야 하는가? 아니면 '점거하라' 운동의 에너지를 노동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확장해야 하는가?

이것은 운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다. 어떤 이는 '점거하라' 운동의 조직과 전술이 전통적인 노조의 방식을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사회주의자를 포함해 다른 사람들은 '점거하라' 운동을 더 넓은 노동계급 운동을 일깨우는 세력으로, 그것의 노동 진출 위원회를 기층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포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민중의 마이크

노동 진출 위원회 모임은 복잡하고 변형된 형태의 '합의제'를 통해 운영된다. 이것의 장점은 심각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덕분에 모임 진행 속도는 매우 느리다. '민중의 마이크'가

사용될 경우 더 느려진다.

민중의 마이크는 뉴욕 시의 법이 전원 앱프 시설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개발된 것이다. 연설자들은 문장을 짧게 끊어 말한다. 주변 사람들은 연설자의 문장을 크게 반복해 말한다. 민중의 마이크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 사례다.

이렇듯 '점거하라' 운동의 '특이함'은 이유를 알고 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사회적 맥락이 다른 곳에서 그들을 무비판적으로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의 다음 단계와 요구다. 내가 얘기를 나눈 시위 참가자들은 운동이 명확한 요구가 없는 것이 다른 운동에 진출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요구를 제기하면 운동의 폭이 좁아지거나 운동이 민주당이나 기타 '현상 유지' 정치에 이용당할까 봐 걱정한다.

하지만 월가 점거 현장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학생 부채 탕감, 주택 가압류 중단, 월가 금융 기구에 대한 엄격한 통제 등 운동 내에서 종종 날카로운 요구들이 제기된 것을 잘 알 것이다.

이런 구체적 요구들은 운동이 외부 사람들과 접촉하고 성장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 기성 체제가 이런 요구들을 저항 없이 쉽게 수용할 리도 없다.

월가 점거 운동은 미국 급진 정치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판돈은 매우 크다. 전 세계 노동자와 민중은 세상을 바뀌어야 한다. 월가 점령 운동은 세상에 도전하는 전 세계적 운동의 중요한 일부다.



“99퍼센트가 모두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을 만나서 '99퍼센트의 저항' 운동의 의의와 이주노동자 차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미셸 위원장은 10월 22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오류파이 서울' 2차 집회에서 멋진 연설로 참가자들을 고무했다.

99퍼센트 저항 운동에서 매우 큰 에너지와 희망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운동은 평범한 99퍼센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의 국제적 성격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전 세계 공통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반자본주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체제는 대다수 사람들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만 보장합니다. 사람들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죠. 이 체제는 우리의 꿈까지도 팔아먹습니다.

우리는 아직 99퍼센트 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면 지금 이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 체제에서 벗어나 있을 수 없죠. 당신이 정규직 노동자든, 비정규직 노동자든 우리는 모두 이 체제의 희생자들입니다.

해방과 자유

그래서 이 운동에 더 많은 노동자가 참가해야 합니다. 99퍼센트의 다수는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는 이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주역입니다. 노동자가 일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그리스를 보세요.

한편, 이 체제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 민족주의 등등으로 말입니다. 자본주의는 당신이 열심히 일하면 더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죠. 이것은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환상입니다. 자본주의는 오직 개인의 능력, 개인의 성공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주노동자에 관해 말하자면, 국적에 따른 차별은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분열 지배 전략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보다 더 적은 임금, 더 적은 권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이 사회를 건설하고 모든 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일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매우 힘든 경험을 했고 탄압도 당했습니다. 지금 저는 정부한테 비자도 박탈당했고 벌여놓은 돈도 없지만 이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전보다 해방되고 자유로워졌다고 여깁니다. 이전에 저는 제 자신을 비난했어요. 내가 인내심이 없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공부를 많이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투쟁하면서 내가 아니라 이 체제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는 스스로 존중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인터뷰·정리 이정원

우리는 99퍼센트인가?

'우리는 99퍼센트다'라는 구호는 일각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이는 노동계급이 전체 인구의 99퍼센트일 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또 어떤 이는 지배계급이 1퍼센트보다는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구호의 핵심 의미를 놓친 것이다. 이 구호의 목표는 통계적으로 정확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구호가 강조하는 것은 압도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소수의 사회 최상층에 반대해야

할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미국인은 사실상 노동계급에 속하더라도 자신을 '중간계급'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 구호는 이런 옛 논쟁을 초월해 99퍼센트가 1퍼센트 적에 맞선 투쟁에서 동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월가 점거 운동에서는 공통의 적에 대한 강조를 쉽게 볼 수 있다. 광장에 걸린 현수막들은 '우리는 미국', '우리가 민중'과 같은 표현보다는 '1퍼센트가 우리 적

이다', '은행과 기업이 우리 적이다'와 같은 표현을 더 자주 볼 수 있다.

또, 이런 구호들은 단순히 현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다. 점거 참가자들은 행진하면서 "우리가 99퍼센트다, 당신도 99퍼센트다" 하고 외친다.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운동에 참가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출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다가올 고통전가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박설

세계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세계의 엔진으로 불려 온 중국 경제가 휘청대면서 어두운 그림자는 짙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진정한 문제는 지배자들에게 위기를 해결할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럽 등 세계 지배자들은 대중에게 끔찍한 내핍을 강요하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도 긴축으로 방향을 잡았다. '2008년 에 살을 찼었다면 이제는 뼈를 깎을 차례'라는 얘기도 나온다. 사실 용산 살인 진압도, 쌍용차 살인해고도 바로 2008년 위기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2008년 위기 이후 한국에서 주변부 미조직 노동자들이 공격의 타깃이 됐다. 노동조합에 가입조차 못한 비정규직과 서비스업이 집중적인 타격을 입었고, "조직 노동은 위기의 주요 타격 대상에서 얼마나 빗겨나" 있었 다(김유선 한국노동사학회연구소 소장). 조직된 정규직은 단기간의 회복 국면에서 투쟁 보다는 '있을 때 밟자는 심정'에 골랐다.

대신 쌍용차나 현대차 비정규직처럼 부도 기업이나 집중 공격으로 불안이 누적돼 온 부문에서 투쟁이 솟구쳤다. 이런 투쟁은 매우 격렬했고 장기간 지속됐지만, 노동조합 운동의 전반적 사기저하 속에서 정치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하고 패배를 겪었다.

그러나 위기가 심화하면, 공격은 지금까 지처럼 주변부 노동자들에게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미조직 부문에서 시작해 점차 조직된 비정규직으로, 조직된 정규직으로 확대될 것이다. 주요 부문에서 공격이 확대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 급속노조 노동연구원은 "다가올 큰 싸움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조직에서 조직 부문으로

물론, 경제 위기가 계급투쟁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복잡하고 모순적이다. 위기는 분노뿐 아니라 엄청난 공포를 수반한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질 수 있고, 가계 대출, 고액 등록금과 치솟는 물가, 노후 걱정이 앞설 수 있다.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위축돼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노동조합 운동의 사기가 꺾여 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경제 위기 상황에선 노동자들도 일정한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타협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개혁주의가 이 과정에서 투쟁의 분출을 말리는 구실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포를 분노와 행동으로 바꿀 잠재력은 존재한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가 낳는 정부의 폐렴덕과 지배자들의 정치 위기 심화는 기존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좌파 활동가·대의원·간부 들의 구슬도 크고 작은 투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의 몇 가지 상황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심각한 경제 위기는 정치적 휘발성을 키우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는 현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다. "대량 실업, 부의 편제, 금융의 폭주에 분노하는 시위대가 마치 약수이나 한 듯 한날한시에 세계를 휩쓸는 현상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처음 나타난 역사



노동자들은 이윤 드라이브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힘을 발휘하려면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끌어올려야 한다.

적인 사태다. 한국 역시 정치·경제의 '복합 위기'로 말려들었다."

광범한 고용불안은 노동자들을 압박해 경제투쟁을 제약하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공분을 키우고 뿌리깊은 불만을 누적시킨다. 이 속에서 갑작스럽게 정치투쟁이 폭발할 수 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제한적 방식으로 전개됐는데도, '희망버스'라는 연대 운동이 전국로 투쟁으로 발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휘발성

물론, 선거는 모순적 효과를 낸다. 노동조합 운동의 자신감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선거는 일정하게 수동적 기대를 부추기는 효과를 내고 있다. 적잖은 노동조합 상층 지도자들은 투쟁보다는 야권 연대를 통한 의회 진출로 노동조합 운동 위기의 돌파구를 찾고 싶어 한다.

동시에, 이명박의 선거 패배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지난해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된 이후 전교조 전복지부는 정부의 교원평가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었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격적 조직도 건설됐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도 서울지하철·도시철도·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자극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선거 과정에서 운동의 요구를 제

기하고 투쟁을 자극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선거에서 진보정당과 후보가 한나라당을 폭로하고 민주당이 대변하지 않는 투쟁의 요구와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개입해야 한다.

셋째, 노동조합 운동 내 정치적 주도력 문제가 중요하다.

이직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전투성이 부족한 상황에선 운동의 방향과 논점에 개입할 수 있는 대의기구에 전투적 활동가들이 많아야 한다. 단결·투쟁을 통해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층 대의원·간부들의 존재는 사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활동가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각각의 투쟁 경험들을 일반화하며 연대와 투쟁을 건설해 나간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노동조합 운동은 위기이지만 여전히 적잖은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저항에서 핵심적 구실을 할 수 있다. 야랍 혁명에서도, 월가 '점거하라' 시위에서도 노동조합과 조직 노동자들의 참여는 운동을 전진시키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자본주의 체제의 동력인 이윤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어마어마한 힘과 낮은 자신감 수준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노력과 대비가 절실하다. 그래야 다가올 전면적 공격에서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킬 수 있다.

한국 노동자들도 유럽처럼 싸울 수 있을까?

이집트 혁명과 유럽 노동자 총파업, 미국 월가 시위로 이어진 세계적 저항이 한국의 노동운동을 자극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적잖은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좌파들도 이런 투쟁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노동조합 운동이 침체를 겪으면서 '파괴 한국 노동자들도 저렇게 싸울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제기되곤 한다. 일부에선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 노조운동에 대한 회의도 커지고 있고, 한국 노동자들이 보수화돼 여는 대야 투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위기를 거듭하다가 울며먹 공공공부 파업으로 노동자 투쟁의 부활을 알린 영국 노동조합 운동은 사태의 다른 그림을 보여 준다.

바로 지난해 여름, 노조 상층 지도자들은 심지어 TUC(영국노총) 총회에 내뱉을 강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어마어마한 힘과 낮은 자신감 수준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노력과 대비가 절실하다. 그래야 다가올 전면적 공격에서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킬 수 있다.



99퍼센트 행동을 참가한 건설 노동자

조남호를 무릎꿇리기 위해 6차 희망버스로 결집하자

한진중공업 사측의 가증스러운 작태가 계속되고 있다.

눈물까지 흘려가며 '국회 권고안'을 수용했던 조남호는 정작 교섭이 시작되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교섭에 나온 사장 이재용은 "왜 그런 약속을 했는지 원망스럽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명박과 우파가 한진 사측의 이런 태도를 부추기고 있을 것이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무사히 땅을 밟길, 한진중공업에서 쌍용차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은 짓밟히고 있다.

저들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자명하다. 2년간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기세를 꺾어 놔는데, '희망버스'에 밀려 양보하게 되면 이후 노동자들을 쥐어짜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파 노조 집행부 당선으로 이런 우려는 더 커졌을 것이다.

저들이 저렇게 버티는 동안 김진숙 지도위원은 크레인에서 다시 겨울 이불을 꺼내고, 해고자들은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최근 한진중공업 사측이 "불안한 노사 관계로 계약이 안 된다"며 2백60명을 유급휴직하겠다고 압박한 데서 볼 수 있듯, 더 큰 투쟁으로 저들을 굴복시키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겨레>가 한진 사측을 비판하면서 "노조 역시 타협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지금 교섭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측에게 있다. 이들은 역겹게도 "처벌"



운운하며 김진숙 지도위원의 사과문을 요구하는 등 어거지를 쓰고 있다. 따라서 사태 해결의 진정한 방안은 지금까지 '희망버스'가 해 왔던 것처럼, 연대와 투쟁으로 사측과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다. 김진숙 지도위원과 급속노조, '희망버스'가 민주노총에게 전국노동자대회와 부산 개최를 요청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이런 요구를 수용해 11월 26일 부산에서 2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희망버스도 이때에 맞춰 6차 희망버스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11월 13일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1차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를 외쳐야 한다. 그리고 11월 26~27일 부산에서 다시 한 번 '희망버스'의 저력을 보여 줘야 한다. 그래서 조남호를 무릎 꿇리고 승리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조명지

‘프레카리아트’가 새로운 투쟁의 주체인가?

일자리 삭감을 수반하는 파견 노동, 외주화, 사유화의 증가 탓에 이제는 편찮은 정규직이 없다는 정서가 생겨났다. 극단적 불안정을 특징으로 하는 노동자 집단을 뜻하는 새로운 '프레카리아트'에 관한 생각이 일부 좌파 사이에서 유행하게 된 것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이런 주장들은 노동계급이 아직도 자본주의에 도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둘러싼 논쟁에서 중심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떤가? 새로운 '프레카리아트'는 존재하는가? 노동 환경은 얼마나 바뀌었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최근 상황에는 연속성과 변화가 모두 있다. 첫째로 한국 노동자의 절반은 여전히 정규직으로 고용돼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올해 3월 현재 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51.5퍼센트이고, 비정규직의 21.3퍼센트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상시 고용된 상용직이다.

물론, 정규직화 요구는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는 고용불안과 일자리에 관한 두려움이 커졌음을 보여 준다. 현재의 노동자들, 특히 청년 노동자들이 왜 두려워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엄연한 사실들이 많다. 한국에서 20~24세 청년 실업률은 정부 공식 통계로만 8퍼센트다. 더구나 실질적인 체감실업률은 이것의 4.3배에 달한다는 통계도 발표됐다.

취업자 구조에도 변화가 있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에서 기간제 일자리가 92만6천 명에서 1백98만9천 명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기간제가 전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해 24퍼센트가 된다.

상대적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파견·용역 노동자도 두 배 가량 증가했다.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의 다수는 아주 불안정한 단기·일용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상용직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간제의 59.6퍼센트, 파견직의 66.2퍼센트, 용역직의 61.6퍼센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작업장에 임시직이나 파견직을 도입하는 것의 한 가지 효과는 불안정성을 높이는 것인데, 이 효과는 임시직·파견직뿐 아니라 기존의 정규직에게도 해당한다. 그러나 파견 노동자로 직접 고용 노동자를 대체하는 데는 한계도 있다. 노동자들에게서 최대한 얻어 내라면 고용주들은 자신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교육받은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경제 위기 때마저도 많은 고용주들이 잘 훈련받은 숙련 노동자를 보유하고 애쓴다. 게다가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는 수 년~십수 년 씩 일을 시키기도 한다. 오랫동안 그 일을 해서 숙달된 노동자를 해고하고 새로운 노동자를 다시 교육시키는 것은 자본가에게도 손해이기 때문이다.

노동 세계의 변화를 둘러싼 주장이 세롭지 않듯이, 불안정 노동에 관한 주장도 새롭지 않다. 지난 10여 년간 비정규직 전 투는 반박해서 일어났다. 예를 들어, 현재자를 비롯한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받은 숙련 노동자를 보유하고 애쓴다. 게다가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는 수 년~십수 년 씩 일을 시키기도 한다. 오랫동안 그 일을 해서 숙달된 노동자를 해고하고 새로운 노동자를 다시 교육시키는 것은 자본가에게도 손해이기 때문이다.

제조업

더는 정규직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더불어 이제는 "진정한" 일자리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진정한 일자리가 없고 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제조업이나 숙련 육체 노동을 생각한다. 이 직종은 한때 노동계급 투사를 많이 배출했던 곳으로,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 금속산업이 있다.

한국에서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이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0년 15.9퍼센트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엔 27.6퍼센트

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말은 제조업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줄어들었지만(규모로만 보면 제조업 노동자 수는 1980년대보다 1백만 명 넘게 늘었다), 각각의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더 강해졌을 것을 뜻한다.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많은 직종에도 전통적 노동계급 직종이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버스·철도 노동자, 우체국 노동자, 배달 노동자 등이 있다.

그러나 변화도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동자 조직의 중요한 부위로 떠올랐다. 유럽이나 이집트에서도 교사, 강사, 공무원, 보건 노동자 등이 파업에 중요한 일부였다.

자본주의는 역사 내내 끊임없이 스스로 변해 왔다. 끊임없는 이윤 추구 압박에 자본가들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투자하고, 이에 따라 노동계급의 구성이 변한다. 이처럼 자본주의 내 변화로 말미암아 노동의 성격, 즉 노동의 종류와 방식이 계속해서 바뀐다. 이런 변화를 보며 지배계급과 일부 좌파들은 계속해서 체제가 상상 이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대체로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 사상이 낡았다는 주장과 붙어 다닌다.

자기 해방

그러나 자본은 능동하지 않다. 자본은 어디에서나 저항에 부딪힌다. 스페인, 그리스, 중국, 영국에서 말이다. 세계화 덕분에 고배를 마신 다국적 자본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세계를 누빈다는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 다국적 기업들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국내 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해외 판로 개척과 국제 금융 거래는 비교적 쉬워졌을지 몰라도 생산 이전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다.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자국 정부의 지원과 보호에 기대기도 한다. 자본가들이 실제 하는 행동은 보면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최초 고용계약법 반대 투쟁이나 스페인의 '분노한 자들' 운동 같은 청년 노동자들의 투쟁은 거대한 저항운동과 파업을 촉발하고 여기에 노동계급의 다양한 부문을 끌어들이고 고무할 수 있다.

그러나 둘째 위험도 있다. 바로 새로운 '불안정' 노동자만을 조직화할 가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기존 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깊은 회의를 반영한다. 물론 노조는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노조 상층 간부층이 오랫동안 형성된 곳에서 그렇다.

그러나 올해 그리스, 튀니지, 이집트에서는 대중파업이 정부를 뒤흔들고 독재자를 몰아냈다. 노동자들은 생산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회적 힘이 있다. 조직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자본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러면서 지배계급에 맞선 투쟁에서 실업자와 학생들은 다른 집단을 이끌게 된다.

핵심은 노동자들 사이의 단결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체 노조 운동이 임시직,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맞선 전투를 벌이도록 하면서 말이다. 우리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단결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탓에 노동계급의 힘이 사라졌다는 관념을 거부해야 한다. 새로 등장한 미조직 노동자의 힘은, 정규 조직 노동자의 힘은 말이다.



을 따냈다.

'불안정' 노동자들이 독특하고 독립적인 집단을 형성했다는 주장에는 그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과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애초부터 두 집단 사이에는 항구적 분열은 없다. 많은 노동자들은 한때는 비정규직을 얻으려고 했고, 또 다른 때에는 정규직 고용 계약을 할 것이다. 경기 침체 때는 공공 서비스가 대폭 삭감되면서 모든 노동자들의 지위가 어느 정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

두 가지 함정

그러면 좌파는 불안정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

첫째는 불안정 노동자나 새로운 산업의 노동자는 조직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이다.

하지만 공공노조를 비롯한 일부 노조들은 청소년 노동자들을 조직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했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어떤 부분의 노동자라도 조직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일부 민주노총 지부본부나 일반노조 등은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금호타이어 노조 등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따내기도 했다. 활동가들은 노조가 없는 작업장과 새로운 산업 부문을 조직할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최초 고용계약법 반대 투쟁이나 스페인의 '분노한 자들' 운동 같은 청년 노동자들의 투쟁은 거대한 저항운동과 파업을 촉발하고 여기에 노동계급의 다양한 부문을 끌어들이고 고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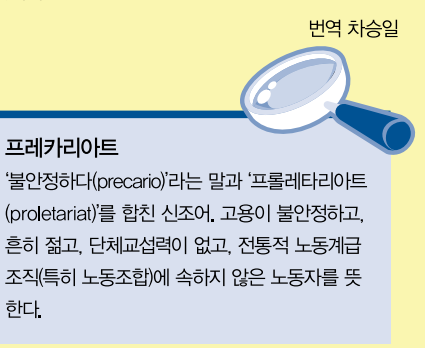
그러나 둘째 위험도 있다. 바로 새로운 '불안정' 노동자만을 조직화할 가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기존 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깊은 회의를 반영한다. 물론 노조는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노조 상층 간부층이 오랫동안 형성된 곳에서 그렇다.

그러나 올해 그리스, 튀니지, 이집트에서는 대중파업이 정부를 뒤흔들고 독재자를 몰아냈다. 노동자들은 생산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회적 힘이 있다. 조직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자본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러면서 지배계급에 맞선 투쟁에서 실업자와 학생들은 다른 집단을 이끌게 된다.

핵심은 노동자들 사이의 단결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체 노조 운동이 임시직,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맞선 전투를 벌이도록 하면서 말이다. 우리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단결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탓에 노동계급의 힘이 사라졌다는 관념을 거부해야 한다. 새로 등장한 미조직 노동자의 힘은, 정규 조직 노동자의 힘은 말이다.

이 글은 영국의 반지분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리뷰>에 실린 글을 한국 상황에 맞게 변한 것이다.



카다피 사후, 리비아는 어디로 갈 것인가?

카다피가 사살된 이후 리비아 전망에 관한 양극단의 시각이 존재한다. 한편에는 서방 제국주의의 개입을 강조하며 리비아가 단순히 서방의 꼭두각시가 될 듯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견해에는 반제국주의적 정서가 담겨 있으나 카다피가 극악한 독재자였고 그가 통치한 42년간 리비아 민중이 겪을 고통을 무시한다. 또한 카다피가 서방 지배자들과 더러운 거래를 일삼았다는 사실에도 눈감는다. 다른 한편에는 독재자의 몰락을 강조하며 리비아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견해는 서방의 개입에 따른 여러 악영향을 간과한다. 리비아 혁명 과정을 잘 복개해 보면, 리비아의 앞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모순적 요소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레바논 출신 사회주의자 **사이먼 아사프**(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책갈피) 공저자)가 리비아 혁명에 대한 비교적 세심한 분석을 제공한다.

무아마르 카다피의 마지막 순간이 담긴 혼란스러운 비디오와 사진이 보도됐을 때, 대중은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깊은 불안감도 동시에 생겨났다. 리비아 혁명은 서방 열강한테 승리를 빚졌다. 그러나 나라를 서방에게 넘기려고 이 혁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카다피를 애도하지 않는다. 카다피를 법정에 세웠다면 좋았을 테지만, 그는 많은 비밀을 안고 저승길로 가 버렸다. 그런 비밀 가운데는 카다피와 서방이 맺은 많은 더러운 거래의 세세한 내역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그의 죽음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카다피는 자기가 박해하던 사람들의 손에 죽었다. 모든 독재자의 운명이 이래야 한다. 2011년 2월 15일 카다피군이 평화로운 시위대에 발포했을 때 카다피 자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다. 이 시위는 이집트와 튀니지 혁명에 고무된 청년들이 조직했다. 시위대는 리비아의 2대 도시 벤가지의 법원 청사 바깥에 리비아판 타호리르 광장을 만들었다. 벤가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보안군을 제압하고, 진압군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었다. 벤가지의 성공은 전국적 반란을 촉발했다. 공업 도시 미스라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수도 서쪽의 자위야도 합세했다. 오랫동안 억압 받아 온 서부 산악지대의



10월 24일 카다피 정권의 몰락을 축하하는 리비아인들

베르베르인들도 반란을 일으켰다. 수도 트리폴리에서도 청년 수천 명이 벤가지의 요청에 화답해 거리에 나섰다. 청년들은 용맹했지만 중무장한 친정권 세력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들의 반란은 실패했다. 많은 사람들이 튀니지로 도피하고 지하로 숨었다. 카다피 정권은 여전히 지지 기반이 있었다. 카다피 정권은 지지자들을 동원해 무기를 나눠주고 군대에서 반대 세력을 숙청했다. 사병과 장교 수백 명이 살해됐고, 정부의 핵심 인사들도 살해됐다. 수많은 민간인이 체포됐다. 이들은 대부분 나중에 살해됐다. 카다피의 반혁명으로 아랍 정권들이 폭력에 기대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잔인한 공격 탓에 평화적인 운동이 무장 봉기로 발전했다. 그것은 불균형한 전투였다. 트리폴리 서쪽 근교 자위야의 수비대는 탱크 네 대와 적은 무기만 보유하고 있었다. 정권은 탱크 50대와 중무장 전투병 수백 명을 보냈다. 동쪽에서는 혁명군이 미스라타와 트리폴리를 구하려고 진격했다. 빈약하게 무장하고 군사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혁명군은 카다피의 요새인 시르테 외곽에서 매복에 걸렸다. 벤가지까지 밀리는 기나긴 후퇴가 시작됐다. 카다피군이 반란이 일어난 도시에 접근했을 때, 카다피는 “우리는 어떠한 자비와 동정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혁명의 미래가 암울해 보였다. 청년 혁명가들의 애초 바람은 무시됐다. 외국의 개입을 모두 거부한다는 요구를 포함해서 말이다. 그리고 나서 서방이 들어왔다. 나토의 전투기들이 카다피의 공세를 저지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서방 열강들은 이제 혁명을 가로채려 했다. 그 과정은 옛 정권의 고위 이탈자들이 혁명에 합류하면서 시작했다. 반란의 초기 지도자들이 세운 과도국가위원회(NTC)가 이 이탈자들의 통제를 받게 됐다. 새 지도부는 서방 열강의 지원을 기대했다. 서방은 군사적, 재정적, 정치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매우 컸다.

제재 대중은 서방의 공갈 협박에 직면해 서방에 모든 것을 내어 주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느꼈다. 나토의 공습이 시작되기 직전에도, 벤가지의 청년 혁명가들은 여전히 서방의 개입을 반대했다. 그들은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혁명가들은 나토의 전투기와 그것에 딸린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은 “지상군” 투입은 결코 양보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거둔 작지만 중요한 승리가 될 터였다. 그러나 서방의 군 장교들이 몰려왔다. 카타르의 특수부대 등도 몰려들었다. 나토 공습의 효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전투기의 공습으로 정부군은 괴멸됐다. 그러나 지상의 전투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전투는 대부분 무장한 시민들이 담당했다.

전쟁의 초점이 트리폴리 남부의 미스라타와 서부 산악지대로 옮겨갔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분할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은 서부 산악지대의 반란군이 튀니지 접경 지역을 장악한 여름 무렵 바뀌었다. 트리폴리 등지의 서부 도시들에서 탄압을 피해 피신했던 많은 리비아인들이 다시 국경을 넘어와 전투에 참가했다. 8월 20일, 트리폴리에서 다시 반란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반란군이 그 도시로 세도했다. 대중의 구실은 최후의 전투에서 결정적이었다. 반란의 시작을 알렸던 대중 시위가 결정타를 날릴 참이었다. 정권의 마지막 요소들이 몰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러나 이 승리는 리비아, 그리고 서방

의 지원을 받는 새 정부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감추고 있다. 옛 질서의 많은 부분을 그대로 두는 것이 바로 새로운 정권이 ‘서방과 맺은’ 계약 조건이다. 여기에는 석유 계약, 이슬람주의자들을 통제하겠다는 보장, 유럽의 남부 국경을 사하라 이남의 이주민한테서 “확보”하겠다는 약속 등이 포함된다. 서방 열강은 리비아에서는 “옛 정권 인물들을 몰아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즉 이라크와는 달리 옛 정권의 인물들이 자기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미스라타 군사위원회는 이미 트리폴리의 과도 정부가 내리는 모든 강압적 요구들을 거부하고 있다.

옛 체제를 살짝만 바꿔서 재활용하려는 시도 또한 이슬람주의자들의 반대를 받았다. 반란군의 핵심 군사 지도자들 상당수가 이슬람주의자들이다. 반란에 참가한 많은 세력이 과도국가 위원회가 새 정부를 마음대로 구성한 것을 비난하며 이제는 과도국가위원회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 승리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 정책이 되살아났고, 이제 “유연한 군사력”이라 불린다.

카다피의 몰락은 아랍 혁명 전체의 환영을 받았다. 예멘, 이집트, 시리아에서 사람들이 승리를 축하했다. 반란군의 깃발이 아랍 세계 곳곳의 시위 현장에서 펄럭이고 있고, 리비아 혁명은 여전히 아랍의 봄의 일부로 여겨진다. 혁명은 슬로건을 외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혁명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공동의 운명을 결정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전쟁 동안 리비아에 강요된 제약들은 혁명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의 열망과 커다란 마찰을 빚을 것이다. 리비아에서 벌어진 반란은 혁명의 모든 특징을 보여줬다. 그러나 내전으로 나라가 기진맥진해 있다. 새로운 리비아의 정치에서 사라진 요소는 혁명 초기의 성공을 이끌었던 청년 활동가들이다. 그들이 리비아의 새로운 질서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아랍 혁명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이먼 아사프
출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정중수

이간질을 뚫고서 전진하는 이집트 혁명

새롭게 시작된 대중적 파업 물결 때문에, 11월 말로 계획된 하원의원 선거를 통해 ‘안정과 질서’를 되찾으려는 군사최고위원회의 희망이 허물어지고 있다. 우편 노동자, 교사, 설탕 정제 노동자, 대학교 직원, 버스 운전사, 공항 직원, 의사, 수자원관개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했다. 경제적 요구와 모든 작업장에 침투해 있던 무바라크 국가 기구의 기관들을 해체하라는 요구는 파업 물결을 일으킨 쌍두마차였다. 군사최고위원회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양보하면서 파업을 무마시키려 했고 일부는 성공했다. 마할라 알쿠브라의 거대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2만2천 명의 파업 위협을 무마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럼에도 9월 말에서 10월 중엽 사이에 노동자 50만 명이 파업을 벌였다. 새로운 노동자 집단이 투쟁에 돌입했다. 교사들의 파업은 1951년 이래 일어난 최초의 전국 파업이었다. 교사 파업은 소도

시와 촌락에까지 파업 물결을 전도하는 구실을 했다. 많은 이집트인들은 처음에는 군대가 혁명의 요구들 — 충분한 임금 지급, 임의 체포와 임의 재판 폐지, 무바라크 집권기 고위 관료 제거 — 를 실현해 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는 기다리지 않으려 한다. 예컨대, 지난 6월 재정부 장관이 최저 임금을 7백 이집트파운드로 인상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많은 노동자와 노동운동가들은 최저임금을 1천2백 이집트파운드로 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파업 교사들이 호소해 열린 한 집회 제목은 ‘이제 유예기간은 끝났다’였다.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이 성장하면서 무슬림형제단 내부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교사들은 역사적으로 무슬림 형제단의 창립과 발전에서 중심축이었다(무

슬림형제단의 창립자인 하산 알바나가 교사였다). 지난 10월 초 카이로의 내각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교사 수만 명 중 다수가 무슬림형제단 지지자였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 경선으로 치러진 의사협회 선거에서 무슬림형제단은 지난 30년 동안 유지하던 의사협회 전국위원회 독점을 상실했다. 좌파가 지지한 독립적 후보들은 특히 주 단위 의사협회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혁명의 핵심 지역인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수에즈, 이스마일리아에서 특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 **채찍** 이런 아래로부터의 점증하는 압력에 직면한 군부는, 적어도 그 일부는 당근에서 채찍으로 정책을 전환했고, 지난 10월 카이로에서 열린 콥트교도들의 집회를 공격하고 종단주의적 혐오를 조장했다. 적어도 23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집트에 상당한 수가 있는 소수파 종교인 콥트교도들을 급진화시켰다. 이것은 국가의 탄압에 직면해 종단 내부의 삶으로 후퇴했던 과거로부터 변화한 것이다. **파업 물결은 이집트 전역의 작업장에서 무슬림과 콥트교도를 단결시키며 그 자체로 종단주의의 불을 지피려던 시도를 막아내는 중요한 방책(防柵)이 됐다.** 군사최고위원회가 노동자들에게 큰 양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제약을 받고 있다. 실제로 경제는 거의 확실히 축소되고 있다. 어떤 추정치를 보면 이집트 경제는 연 5~7퍼센트 성장해야 해마다 새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70만 명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한다. 해외 직접투자 붕괴와 자본도피도 외환보유고를 축내면서 이집트의 국제수지 악화에 일조했다. 외환보유고는 2010년 9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 탓에 갑작스러운 경제 위

기가 오면 정권이 기초 식품을 충분히 수입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장군들에게는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8퍼센트 수준이고,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자극한다. 군사최고위원회는 양보를 하더라도 너무 적고 공문구였던 것으로 밝혀져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를 돋우는 동시에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상황에 처해 있다. 탄압은 오직 사람들을 더 급진화시키기만 할 뿐이고 혁명을 파괴할 만큼의 규모는 되지 못할 것이다. 장군들은 혁명을 파괴하려고 전면전을 벌였을 때 군대가 계급선을 따라 쫓겨질까 봐 두려워한다. 그들은 이 때문에 2월에 무바라크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혁명은 아직 진행 중이다. **마크 L 토마스**
출처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번역 차승일

볼리비아 좌파 정부는 어디로

잘못된 길에 빠진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의 좌파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기대를 모아 왔다. 에보 모랄레스가 볼리비아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대중운동을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근래 모랄레스의 말과 실천 사이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 원주민 4천 명은 이시보로 세쿠레 국립공원에서 행진을 시작했다. 이 지역은 볼리비아 동부에 있는 아마존 보존 지구로서 ‘원주민 보호구역과 이시보로 국립공원(TIPNIS)’으로 불린다.

여러 달 동안 계속된 이 행진의 대열은 곧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의 대통령궁 옆에 집결할 것이다. 그때쯤이면 대열 수가 크게 불어나 수만 명을 헤아릴 것이다. 노조원, 학생, 원주민, 공동체와 좌파 조직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이 행진은 전국적인 저항의 초점이 됐다. 이 운동은 모랄레스에게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모랄레스는, 2000년 초 라틴아메리카를 휩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원주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 덕분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모랄레스와 그와 비슷한 몇몇 사람들은 라틴아메리카와 세계에서 희망의 등불이 됐다.

모랄레스는 안데스 산맥의 광부 집안에서 태어났고 원주민 언어(케추아)를 쓰며 자라났다. 광산업이 기술자 그들은 토지를 얻어 코카를 경작하기 시작했다. 모랄레스는 코카 재배 농민 조직의 리더가 됐다.

모랄레스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2000년 코차밤바 시에서 시작돼 여러 해 동안 지속된 대중 투쟁의 결과였다.

2000년 볼리비아 정부가 코차밤바 시의 상수도 시설을 사유화해 백텔에 팔려하자 지역 조직들이 단결해 저항에 나섰다. 지역 주민들이 승리하면서 코차밤바의 물은 다시 공공의 통제를 받게 됐다.

2년 뒤 원주민이 주민의 다수인 엘알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다국적 수자원 기업 수에즈와 정부가 사유화 계약을 맺었지만 마찬가지로 항의 시위, 점거, 파업이 벌어지면서 사유화가 중단됐다.

대개 원주민 조직들이 주도한 이런 운동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민중 의회들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국유화를 포함한 중요 요구들을 제시했



‘다국적기업의 부관’ 구실을 하며 숲을 파괴하는 모랄레스를 풍자하는 시위대

다. 그들은 IMF와 세계은행의 감독 아래 원유와 천연가스의 이윤을 해외 다국적 기업들한테 넘길 것이 아니라 급격히 하락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선출

모랄레스가 2006년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 그는 지지자들의 오랜 숙원들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볼리비아의 부를 기업의 손에서 환수해 대다수 민중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랄레스는 이전 대통령들과는 달라 보였다. 특히, 미국식 억양으로 스페인어를 말하는 전 대통령 고니와는 많이 달라 보였다.

모랄레스의 당선은 민중이 거둔 승리였다.

2008년 이른바 ‘반달’(半月) 지역, 즉 부유한 동부 지역의 대지주와 기업들이 볼리비아에서 분리 독립하려 했을 때, 모랄레스 정부를 방어하고 우파들의 공격을 좌절시킨 것도 바로 대중 운동이었다.

2009년 모랄레스 정부가 제정한 새로운 헌법의 핵심 내용은 원주민 부족들이 전통적으로 경작해 온 토지에 대해 집단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다. 5백년에 걸친 식민화와 경제적 종속 때문에 그동안 이 권리가 부정됐다.

헌법에는 또한 ‘어머니 지구’, 즉 ‘파차마마’의 권리도 포함됐는데 이는 국제 환경 운동이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

이것은 단지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인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다국적 기업들이 천연자원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인정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모랄레스는 다국적 기업들이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허가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내용과는 달리 그곳 원주민들의 의사를 사전에 묻지도 않았다.

대규모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한 것은 지역 주민한테 혜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석유·가스·광산 다국적기업들이 아마존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더 쉽게 해 주기 위해서였다.

몇 해 전 세계은행이 계획한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이른바 ‘대양횡단 통로’를 건설하는 것이 이 도로 건설의 목표였다.

이 도로 건설 사업에서 주로 이익을 얻는 것은 브라질 기업들이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8번째 경제 대국이며 건설 재벌 오아스를 포함해 여러 다국적기업들의 본사가 있다.

오아스는 표준 건설 가격의 두 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계약을 맺었다. 건설 비용은 킬로미터당 13억 달러며 총 구간은 6백 킬로미터다. 8월 30일, 오아스는 영향력 있는 브라질 전 대통령 툴라의 볼리비아 방문을 주선하기도 했다. 모랄레스는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원주민들의 행진은 이미 2주 전에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대중의 격렬한 저항으로 휘발유 가격을 83퍼센트나 인상하려는 모랄레스 정부의 시도가 좌절된 바 있었다. 이것은 곧 다가올 상황의 전조였다.

8월에 모랄레스는 행진 참가자들을 공격했다. 이 저항이 ‘외국 세력의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고 발전을 정체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대통령 뒤에서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통령 가르시아 리네라는 이 비난에 맞장구를 쳤다.

물론 [해의 단체의 지원을 받는] 일부 NGO와 종교 단체들도 각자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이 행진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쓰디쓴 진실은 모랄레스가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 같은 다국적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했다는 것이다. 사실 최근 대형 외국 광산 회사들과 리튬과 우라늄 채굴 계약을 맺은 것은 모랄레스 자신이였다. 그렇다면 외국 세력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시위대가 유류모에 도달했을 때 진실이 밝혀졌다. 모랄레스의 조직인 사회주의운동당(MAS)은 코카 재배 농민 2백명을 몽둥이와 다이너마이트로 무장시켜 행진을 가로막으려 했다.

이 공격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뛰어들어 행진 참가자 2백70명을 연행했다.

극적인

이 사건은 즉각적으로 여파를 낳았다. 인근의 두 마을 산 보르하와 루레나바케의 주민들이 연행자 호송 차량을 가로막았고 행진 대열에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다.

정부의 야만적인 공격 소식은 금방 퍼졌다. 내무장관 사차 요렌테는 텔레비전에서 집안을 옹호한 뒤 사임했다. 국방부장관 세실리아 차콘은 항의의 표시로 사임했다.

공격이 발생한 지 28시간이 지나서야 모랄레스는 경찰 공격 중단을 명령했다. 또, 그는 자신이 공격 명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발표했다. 모랄레스가 군 최고통수권자이자 볼리비아 경찰의 수장인데도 말이다.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는 국민투표 전까지 도로 건설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매우 분명하게 두 가지 결론 — 찬성과 찬성 — 밖에 없다고 말했다.

TIPNIS 행진은 전환점이었다. 그 행진으로 모랄레스가 말한 ‘대인적인 발전 모델’은 한낱 미사여구일 뿐 현실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여전히 지배적이란 점이 드러났다.

모랄레스 정권은 전임 정권들처럼 국제 자본과 민중 사이에서 중재자 구실을 해 왔다. 어느 원주민 지도자는 그를 일컬어 “다국적기업의 부관”이라 불렀다.

그러나 모랄레스를 권좌에 올린 운동의 목표는 사회를 바꾸고 오랫동안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해 온 사람들에게 사회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민중은 발전을 원했지만, 이렇게 재난을 가져오는 자본주의적 발전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 지금 모랄레스와 리네라는 자본주의적 발전을 여전히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다.

마이크 곤잘레스(세 게버리와 쿠바 혁명)책갈피 저자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소셜리스트 위크)번역 천형석

운동 속의 논쟁

한미FTA가 ‘불평등 협정’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가?

진보진영과 진보적 지식인들, 진보·개혁 언론들에서는 한미FTA가 ‘불평등 협정’이라는 주장이 많고, 이것은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좌파는 이런 주장을 지지하면서도 정부가 미국과 협상에서 불평등을 감수하면서도까지 한미FTA를 비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즉, 친기업·반노동·반복지적이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한미FTA의 본질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일부 좌파는 ‘불평등 협정’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부 불평등한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미국 자본과 한국 자본중 어느 한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불평등 협정’ 같은 용어를 쓰면 민족주의적 정치에 타협하며 계급의 문제를 흐릴 수 있다고도 비판한다.

그러나 이 협정에는 명백하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서 ‘불평등’이 존재한다.

- 한국 투자자는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 한국에서는 이 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하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법이 우선이다.
-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지만 한국 투자자는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법률가들 중에 미국인은 집행위원장을 포함해서 1백37명이지만 한국인은 8명뿐이다. 기타 등등 …

이런 명백한 사실 때문에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한미FTA는 초헌법적인 불평등 협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불평등 협정’이 아니냐라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에

맞서서 범국본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불평등 협정이기도 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한미 양국 민중을 쥐어짜서 얻는 한미 양국 투자자 공동의 이익을 지적하며 계급적 관점의 중요성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불평등 협정’ 인정이 곧 민족주의적 대안까지 동의하는 것이라는 비판은 비약이다.

‘불평등한 한미FTA’를 인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틀리지 않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을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뿐 아니라 자본 간의 경쟁에서도 찾기 때문이다. 자본 간의 경제적 경쟁은 국가 간의 지정학적 경쟁과 결합되고, 경쟁하는 국가들 사이에는 위계서열이 존재한다. 따라서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을 분리시키거나, ‘세계화 시대에 국가는 무대 뒤로 사라지고

평평한 세계가 된다’는 파위의 주장은 틀렸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군사력이라는 ‘보이는 주먹’의 뒷받침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에서 “미국이 만든 여러 기구들과 정책들이 타국 자본들과 자국 자본들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중립적인 것은 결코 아니”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미 간의 지정학적·군사적으로 불평등한 힘 관계가 반영돼 있는 협정이라는 점을 못 보고 단순히 경제적 협정으로만 한미FTA를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미국 백악관 자신이 “이 협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어서 한미 간의 격차는 수십 배가 넘는데 미국이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이익의 균형’을 인정해 줄 리가 만무했다. 더구나 다른 국가들에게 경제 위기의 부담을 더 떠넘기기 위해 안달인 상황에서 말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 지배자들은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일부 ‘이익의 불균형’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만한 더 큰 계급적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 또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는 지정학적 고려도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제국주의 세계체제의 작동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투쟁의 과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국주의 질서 속의 국가 간 불평등 관계에 대한 분석은 곧 계급투쟁을 희석시킬 것이라고 지레짐작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전지윤

세계 인구 70억 시대 — 사람이 너무 많아 문제?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넘었다. 일부 언론은 ‘인구 과잉’이 문제를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사회주의자 존 몰리뉴는 이런 주장을 논박한다.

2백 년이 넘도록 세계에 인구가 너무 많고 이 때문에 빈곤, 실업, 주택난, 환경 파괴가 야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1798년 영국 성직자 러버런드 토머스 맬서스는 ‘인구론’이라는 논문을 출판했다. 맬서스는 인구는 언제나 식량 생산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혹독한 도덕적 규제를 하지 않으면 대규모 빈곤과 기근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부터 시작해 사회주의자들은 맬서스의 이론을 “인류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고 언제나 과잉인구론에 반대했다.

과잉인구론은 틀린 이론이다. 왜냐하면 인류와 인류의 생활수단 사이의 관계를 뒤집고, 과거와 현재의 사실들과 완전히 모순되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폭증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다.

1950~2000년 전세계 인구는 25억 명에서 60억 명으로 늘어 1백40퍼센트 증가했다. 그러나 앞으로 2050년까지 50년 동안 인구는 단지 50퍼센트 증가하고, 그 뒤 50년 동안은 11퍼센트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세계적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기는 하지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수준,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향상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이 아이를 적게 갖는다.

인구 증가가 식량 생산을 능가하는 것은 아니다. 1950~70년 세계 식량 생산은 2백50퍼센트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인구 증가를 완벽하게 넘어서는 수치다.

식량은 모자라지 않다. 반대로 모든 사람

들에게 충분히 공급할 만큼의 식량이 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식량 폭동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시장이 요구하는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본주의 경제와 정치 때문이다.

한 나라의 번영은 인구 규모나 인구 밀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둘이 밀접하게 관련된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8.4명이고 일인당 국내총생산(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인구수로 나눈 수치)은 2천30파운드다.

이와 반대로 베네수엘라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28.5명이고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6천1백90파운드다. 이처럼 베네수엘라는 인구 밀도가 볼리비아의 세 곱절이지만 세 곱절 부유하다.

역사

인구 밀도와 사회적 부 사이의 상관관계가 약하다는 점은 아시아의 두 나라를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인도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3백45명으로, 일본의 3백43명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인도의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1천3백70파운드이지만 일본은 1만 6천7백50파운드다.

인도와 일본은 인구 밀도는 비슷하지만 역사가 다르고(인도는 식민지였고 일본은 식민모국이었다) 경제적 발전 수준이 현격히 다르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경제, 정치, 제국주의, 전쟁, 한 마디로 역사가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지, 인구의 크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은 과잉인구론이 틀린 핵심 이유다.

과잉인구론은 한 나라의 재화(식량, 주택, 의료 서비스, 일자리, 부 등등)의 양을 어느 정도 고정된 것으로 보고 인구를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이 이런 모든 재화를 생

산하므로, 인구 수 증가는 단지 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재화들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것도 뜻한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인류의 역사는 빈곤과 실업이 계속 증가하는 완전한 재앙이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 인구가 기원전 1년 2억 명에서 기원후 1000년 3억1천 명, 1800년 9억7천8백만 명, 1900년 16억 5천만 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사실 인간 사회의 기본 추세는 더 부유해지고(비록 엄청나게 불평등했지만), 더 잘 살게 되고, 더 오래 살게 되는 것이었다. 바로 그래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다!

인구 증가 과정이 조화롭지 못한 이유는 계급 사회에 내재된 모순이다.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전쟁과 경제 위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자본주의 생산은 이윤에 달려 있으므로, 이윤율이 떨어지면 생산이 감소한다. 인구가 빈곤·실업·기아에 미치는 영향 또는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말이다.

과잉인구론의 정치적 문제는 기후변화와 이주 문제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다. 내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이는 많은 환경운동가들도 환경 쟁점으로 오면 주장의 논조를 바꾸기 시작한다.

그들은 지구의 자원은 한정돼 있고 사람들이 자원을 모두 써 버리고 있다고 말한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원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지고, 인구 증가를 멈추지 않는다면 지구가 파괴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반박한 주장과 마찬가지로 틀린 주장이고,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다.

배출

그렇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는 예지가능한 미래인 인간 활동이 지구 자원을 바닥낼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석유 같은 일부 자원은 아마



사진 출처: Peter Kirk, Wiggins

소말리아인 수백만 명이 굶는 것은 과잉 인구 때문이 아니라 제국주의가 부추긴 전쟁 때문이다.

도 양이 고정돼 있겠지만, 풍력이나 조력 같은 자원들은 그냥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나 식량을 생산하듯이 인간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면 그런 자원을 생산할 노동력도 많아지게 된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탄소 배출 문제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은 주로 화석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다. 인체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 재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 사회가 화석연료를 태우는 이유는 인구 규모 때문이 아니라 화석연료가 대기업들의 이윤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때문이다.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본주의를 전복하거나 자본주의의 우선순위에 진지하게 도전하는 것보다는 10억 명쯤 ‘잃는 것’이 더 쉽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주 문제로 오면 과잉인구론은 대체로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주의를 가리는 데 이용된다.

그들의 주장이 뜻하는 바를 분명히 말하자면, 그들은 일자리·주택·서비스

부족을 이유로 나라가 꼭 찢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가 실업을 야기한다는 주장의 근저에는 어떤 사람들(외국인이나 흑인)은 일자리를 가질 자격이 없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들(영국인)보다 자격이 적다는 생각이 있다.

이런 사고 방식이 가진 불합리성과 인종차별주의는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예를 들어 머리카락이 붉은 사람들)로 바꿔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다.

“나는 머리카락이 붉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본다. 빨강머리들이 2백만 명 있고 실업자도 2백만 명 있다. 빨강머리들을 몰아내자. 그러면 우리 모두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은 인종차별주의의 터무니없는 본질을 극명히 드러낸다.

과잉인구에 관한 여러 주장들은 모두 결국에 가서는 하나로 모아진다. 체제의 문제를 사람들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주장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대해야 하는 이유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쇼셜리스트 위크〉

번역: 차승일

소련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였다

이정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이 책은 1993년에 책갈피 출판사가 《소련 국가자본주의》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후 절판된 것을 오역들을 바로잡고 참고할 만한 논문들을 추가해서 다시 출판한 것이다.

이 책이 한국에서 처음 출판된 1993년 당시는, 구소련과 동유럽이 몰락하면서 그런 사회가 사회주의적 대안이라고 믿었던 한국의 좌파들에게 큰 혼동과 사기 저하가 찾아온 시기였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른바 ‘사회주의’ 국가가 몰락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던 시기였다.

그래서 많은 좌파들이 혁명적 전망을 포기하고 서구에서는 이미 한물간 사조들(포스트마르크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이나 기웃거리고 있었다. 따라서 옛 소련과 동유럽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서방 자본주의와 본질상 다를 바 없는 국가자본주의 체제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이 199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출판된 것은 사회주의 전망을 다시 세울 기회를 제공한 셈이었다.

사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담은 저술이 처음 등장한 때가 1948년이었는데, 이때도 전 세계 혁명적 좌파는 혼란과 방향감각의 상실에 부딪혀 있었다.

그 당시에 소련 사회를 사회주의로 볼 것인지, 사회주의가 아니라면 어떤 사회로 규정할 것인지 그리고 스탈린주의 체제의 구실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이 전 세계 좌파를 지배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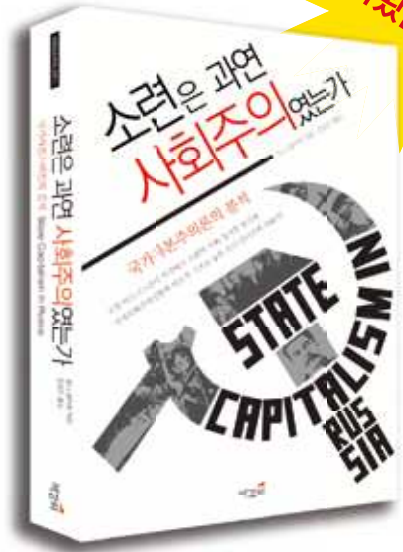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스탈린의 탱크에 의해 소련과 같은 사회로 변모하면서 이런 혼란은 극에 다다랐다.

그 당시 정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스탈린주의를 반혁명적 세력으로 봤지만 그럼에도 러시아는 사회주의라고 여겼다. 그런데 제2차세계대전 직후 동유럽 국가들이 노동자 혁명이 아닌 반혁명 세력에 의해 ‘사회주의’가 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동유럽 국가들을 사회주의라고 규정하면 사회주의가 노동계급의 자주적 행동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게 되는 모순이 생겨났다. 이때 토니 클리프는 소련이 사회주의가 아닌 국가자본주의라고 주장하면서 혁명적 정신을 유지한 채 이런 모순을 피해갈 수 있었다.

자기 해방

토니 클리프는 소련 사회가,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소유·통제하는 관료 지배계급이 서방과의 군사적·경제적 경쟁 압력 속에서 노동자들을 억압·착취하는 자본주의의 한 형태라고 분석했다.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 토니 클리프 지음 | 책갈피 | 496쪽 | 2만 2천 원

새로 나왔습니다

‘혁명적 이론이 없으면 혁명적 실천도 없다’는 레닌의 경구를 되새겨 볼 때, 소련이 국가자본주의라는 이론은 혁명적 좌파에게 중요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해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옛 소련과 동유럽이 몰락한 지 20년이 지났고, 중국은 이미 시장으로 향하는 길을 너무 많이 걸어온 이때 왜 옛 소련에 전착해야

할까? 올해가 옛 소련이 붕괴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서?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자본주의 위기 때문에 주류 언론과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20년 전 옛 소련이 붕괴한 사건을 축하할 여유가 없었다. 옛 소련의 붕괴로 자유시장경제가 승리했고 ‘역사의 종말’이 왔다고 외치던 사람들은 신용을 잃었다.

이 상황에서 이 책의 옮긴이인 정성진 교수는 후기에서 “이제 소련 붕괴 20주년을 맞아 다시 출간하는 클리프의 이 책이 오늘날 세계 대공황 국면에서 분출하고 있는 반자본주의 대중투쟁과 결합해야만적이고 자기파괴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진정한 마르크스적 의미의 사회주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적고 있다.

사실 신자유주의가 아닌 대안에 대한 논의들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변혁적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에게 꼭 거쳐야 할 쟁점이 있다면 그중 하나가 바로 옛 소련의 성격에 관한 문제다. 왜냐하면 한국(또는 세계 그 어느 나라든) 사회의 변혁을 주장할 때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가 하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대안을 주장하는 과정에

서 불거지는 핵심 반론이 바로 ‘옛 소련에서 사회주의 실험은 이미 실패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신자유주의든 아니면 자본주의 체제든 간에 이런 사회에 대한 대안사회를 논의할 때 옛 소련을 사회주의라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론적으로 뿐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책에 부록으로 실린 알렉스 캘리니코스과 데렉 하울의 논문은 토니 클리프가 주장한 국가자본주의론의 핵심 내용을 계승하면서도 그가 보인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토니 클리프가 강조한 국제적 차원의 경쟁 압력뿐 아니라 소련 내부의 임금 노동 관계를 통해서도 가치법칙이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옮긴이인 정성진 교수가 쓴 《마르크스와 트로츠키》(한울)의 제5장 ‘소련 사회의 성격: 마르크스주의적 설명’과 제13장 ‘국제사회주의의 정치경제학: 토니 클리프를 중심으로’를 함께 읽어 볼 것을 권한다. 정성진 교수는 한국에서 국가자본주의론을 선구적으로 소개했는데, 이 논문들은 그 연구 성과가 집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가 노동자 계급의 자기해방이라고 주장했는데, 평생을 혁명가로 살아온 토니 클리프의 이 책은 바로 그 정신이 녹아들어 있다.



대학 본·분교 통합 논란

학벌주의에 맞서 단결 투쟁한 전통을 계승해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대학 구조 조정 차원에서 대학 본교와 분교의 통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여러 대학이 본교와 분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8월 중앙대의 본·분교 통합을 승인한 데 이어 경희대, 단국대 등이 본·분교 통합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본교와 분교의 유사학과를 구조조정하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교와 분교 내에서 갈등이 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 본교 학생들의 반발이 대체로 학벌주의에 편승하고 본교와 분교의 차별 해소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국외국어대 서울캠퍼스 학생들은 용인캠퍼스와의 통합 계획에 반발해 학생총회를 열고 분관을 일시 접거했다. 중앙대 일부 학생과 학생회 등은 안성캠퍼스를 다니던 재학생들의 학적이 자신들과 같아서 안 된다고 반발해, 중앙대 당국이 안성캠퍼스 재학생들의 학적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외국어대 서울캠퍼스의 NL 계열 학생 활동가 등 학생운동 진영 일부도 통합 반대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학벌주의와 본·분교 차별에 맞선 진보적 학생들의 투쟁 전통을 망각한 것이다.

차별에 맞선 투쟁

정부는 1970~80년대에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와 지방 발전 등을 이유로 사립대들의 지방 분교 설립을 권장했다. 사립대들도 분교 설립으로 학생 정원이 증가해 등록금 수입이 늘어나는 등 여러 이점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경쟁적으로 분교를 세웠다.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보다 학교와 재단의 수익 증대 목적이 더 강했으므로, 대학 본교들은 설립 초부터 학생들의 커다란 불만을 샀다. 형편없는 시설, 부실한 강의, 노골적 차별은 분교 학생들의 투쟁을 촉발했다. 그래서 1984년 한양대 분교 학생 2천여 명이 분교 차별에 항의해 거리 시위에 나서, 학생들이 사복형사들을 잠시 억류하는 등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했다.

1987년 항쟁과 맞물려, 분교 차별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저항이 확대됐다.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단국대, 건국대, 동국대 등에서 '지방 캠퍼스 지원 확대와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시위와 점거 농성이 잇따라 열렸다. 1989년에는 제2캠퍼스총학생회연합을 결성해 차별 해소를 위한 공동의 행동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고려대 서창캠퍼스(지금의 세종캠퍼스) 학생 1천2백여 명이 무기한 수업 거부를 하고 집단 상경해, 14일 동안 본관 건물을 점거하고 재단 설립자 김성수 동상에 올라 미를 거는 등 커다란 투쟁을 벌였다.

투쟁의 압력으로 1988년 노동부가 기업체에게 입사 응시 원서에 본·분교 표시란을 삭제하도록 권고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본교와 분교 사이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본교와 분교는 각종 지원에서 차이가 많다. 장학금 수혜율이 대표적이다. 2010년 건국대 본교의 장학금 수혜율은 52.1퍼센트인데 반해, 분교는 고작 39.2퍼센트 수준이다. 최근에는 고려대처럼 지방 분교를 독립체산제로 운영해, 학교 당국이 아예 지원을 끊는 경우도 늘고 있다.

분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적다 보니, 본교의 등록금 인상률이 본교보다 높은 경우도 많다. 2011년 중앙대 서울캠퍼스의 등록금 인상률은 2.9퍼센트인데, 안



2006년 고려대와 고려대 병설 보건대가 통합한 후 병설 보건대 차별에 맞서 투쟁한 고려대의 진보적 활동가들 학벌 차별에 반대해 온 학생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

성캠퍼스는 3.5퍼센트였다.

취업 과정에서 겪는 불평등도 여전하다. 예컨대 고려대 분교 졸업자는 취업률이 64.6퍼센트인데, 분교 졸업자는 48.7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처럼 분교는 정규직 취업을 등 각종 지표가 본교보다 크게 나쁘기 때문에, 아예 대학 평가에서 분교를 제외하고 본교만 평가 받으려는 대학들이 많다.

사정이 이러니 많은 분교 학생들은 소외를 느끼고 심리적 위축감에 시달린다. 심지어 '조려대(고려대 조치원캠퍼스(세종캠퍼스))', '원세대(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분교 학생들을 비하하는 용어들이 인터넷 게시판과 분교 건물 화장실 낙서에 난무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차별적인 용어들 때문에 학생들이 받을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클 텐데 말이다.

본교와 분교 간 차별을 해소하는 데 진보적 학생들은 앞장서야 한다. 본교 학생들이 본교 차별로 득을 얻는 게 절대 아니다. 비싼

등록금, 부실한 수업, 불안정한 취업 등의 문제는 정도 차이가 있을지언정 본교와 분교 학생들의 공통 문제다.

단결

정부와 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투쟁에서 학생들이 분열하면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 등록금 인하, 수업 질 개선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원한다면, 학교 당국과 정부에 맞서 본교와 분교 학생들이 모두 단결해 싸워야 승리를 얻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따라서 대학에서 활동하는 진보 활동가들은 일부 보수적 학생들이 주는 압력에 굴하지 말고, 다수 학생을 단결시킬 수 있는 요구를 내세워야 한다. 이것을 학생들에게 끈덕지고 차분하게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대학 서열화 자체를 폐지하도록 도전해야 한다. 대학 서열화는 계급 지배를 합리화하고 노

동계급을 분열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진행되는 본·분교 통합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일부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이 본·분교 통합이 대학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 걱정하는 건 이해할 만하다. 그리고 본·분교 통합이 차별을 완화시키기보다 차별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이번에 통합 승인을 받은 중앙대가 바로 그렇다. 중앙대는 본·분교를 통합하려고 안성캠퍼스의 경영경제계열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 그리고 안성캠퍼스의 기존 재학생들은 학적이 변경되지 않으며, 서울캠퍼스 소속 학과로 전과하는 것도 여전히 제약 받는다. 즉, 내년에 안성캠퍼스로 입학하는 신입생은 본교생인데, 2학년 이상 선배들은 분교생인 상황이 됐다. 게다가 중앙대 당국은 서울캠퍼스에서도 가정교육과 폐과, 사범대

구조조정 등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본·분교 통합을 반대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과 차별 해소를 위해 본·분교 학생들이 단결해서 싸우는 것은 가능하다. 2006년 부산대에 통합된 밀양대 재학생들이 차별에 항의해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무기한 수업 거부에 들어가자, 부산대의 다함께 회원들을 비롯해 부산대 학생들이 밀양대 학생들의 투쟁에 연대한 바 있다. 같은 해 고려대와 고려대 병설 보건대가 통합되자, 고려대의 진보적 활동가들은 병설 보건대 학생들도 고려대 재학생과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싸웠다. 이 때문에 다함께 회원 등을 비롯해 일부 학생들은 출교라는 징계를 당하기도 했다.

한국외국어대에서도 진보적 활동가들이 본·분교 차별 해소를 위해 학생들이 단결하자고 호소해야 향후 있을지 모를 구조조정에 효과적으로 맞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영익

한국외국어대

“학벌주의적 압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외국어대에서는 본교와 분교의 통합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학교 당국이 본·분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규모를 키우면 대학 평가 순위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의도가 이렇다 할지라도 본·분교 통합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에 학벌주의, 대학 서열화, 서울과 지방 대학 간 차별이 깊이 आरो새져진 상황에서 본·분교 통합은 서울과 지방 학교 사이에 차별을 완화할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지방 분교 학생들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다. 용인캠퍼스 학생들은 분교생이라는 차별적인 꼬리표를 떼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을 환영한다.

그런데 서울캠퍼스 일부 학생들은 “같은 등급이 되기 싫다”, “학벌세탁이다” 하는 말까지 하며 통합을 반대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통합 반대 서명·삭발·단식·비상총회 등을 벌였고 10월 26일 열린 비상총회는 1천5백68명이 참가해 성사됐

다. 총회가 끝나고 3백여 명이 총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여 이틀 만에 학교는 총학생회의 요구안을 수용했다. NL경향 학생회 등 일부 진보적 학생회도 이런 활동에 동참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다.

총학생회는 학교의 비민주적 행태를 문제 삼는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선전물에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밤을 새워 가며 공부했던 날들[을 떠올려 보라]”, “빼앗기는 것은 이름만이 아니다” 하면서 명백히 학벌주의적 태도를 보였다.

갈등

또, 총학생회가 학교에 요구한 협의 테이블에는 용인캠퍼스 학생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총학생회는 11월 2일에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학생회칙을 개정해 복수전공 이수자들을 학생회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강등시켰다. 복수전공제도로 서울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용인캠퍼스 출신 학생들에게서 학생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이다. 이것이 학벌주의적 공격이

아니고 무엇인가.

본·분교 통합을 반대하는 또 다른 근거는 통합이 구조조정의 신평탄이라는 것이다. 물론 본·분교 통합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계를 늦추진 안 된다. 만약 학교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려 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본·분교 통합 반대 주장은 양학교 학생들 간의 갈등을 조려해, 차후에 벌어질 수 있는 ‘진짜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다.

‘다함께’ 한국외국어대 모임, 중국어대 학생회,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 등은 유인물·대자보·강의실 선전 등을 하며 본·분교 통합 반대 운동을 비판하는 활동을 벌였다.

일부 학생들은 우리의 주장을 반대하며 대자보를 떼거나, 유인물을 찢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차별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용기있게 싸우고 있다.

특히 중국어대 학생회는 총학생회와 일부 학생들의 압력에도 끈질기게 학우들을 설득했다.

“일부 학생들은 서울캠퍼스 학생 다수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중국어대 학생회한테 다수결을 따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잘못된 주장을 그저 다수라고 받아들이 수는 없잖아요.(박혜신 중국어대 학생회장)

“용인캠퍼스 사람들이 받는 박탈감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공부하는 용인캠퍼스 복수전공자들은 자신이 복수전공자라는 것을 이야기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앞으로도 올바른 방향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압력이 크지만 앞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큼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주장한 결과, 총학생회 등은 ‘통합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계속 강조해야 했고, 한 NL 경향의 학생회장장은 ‘우리는 사실상 조건부 찬성이었다’며 슬쩍 말을 바꾸기도 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캠퍼스 간 차별과 구조조정 없는 통합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양유진 다함께 한국외국어대 모임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자본주의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

러시아 혁명이 트로츠키는 “인간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사는 것처럼 자본주의는 공황과 호황으로 살아간다. 공황과 호황은 자본주의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따라간다”고 했다.

반면 주류 경제학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수요와 공급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위기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 왔다. 따라서 주류 경제학은 위기를 설명하지 못한다. ‘한계효용이론’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제본스는 불황의 원인을 태양의 흑점 탓이라고 주장했다. 1990년대 초의 위기 때 한 주류 경제학자는 ‘지구에 대한 폭성과 토성의 상대적 위치’가 위기의 원인이라고 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때도 주류 경제학자들은 위기를 설명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 위기가 도래하자 이들 모두는 부분적이고 일면적인 설명만을 늘어놨다. 반면 마르크스주의는 경제 위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정한 한계는 자본 그 자체”라고 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외부나 형태가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에 위기의 원인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자본주의의 동력인 **경쟁과 축적**으로 설명했다.

이윤을 저하

경쟁하는 개별 기업은 남보다 더 싸게 더 많이 판매하려고 최신 노동절약형 설비를 도입한다. 그럴수록 그 기업은 경쟁에서 승리해 더 많은 이윤을 얻는다. 이 때문에 노동자 한 명이 조직하는 기계·설비 등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전체로 봤을 때 노동에 대한 자본의 투자 비율이 계속 커지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오로지 살아있는 노동이다. 결국 자본주의에서는 ‘살아있는 노동’에 비해 ‘죽은 노동’(기계·설비)에 대한 투자가 더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한 이윤의 비율(이윤율)이 장기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

개별 자본가에게는 이득이 되는 것이 어떻게 체제 전체에는 해로운지를 이해



10월 15일 빈곤 철폐의 날 기념대회 참가한 20대 청년 노동자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위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하다. 예컨대 산에 사는 개별 농부들은 겨울에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뿔감으로 쓰고 시장에 팔아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때 나무를 베는 개별 농부의 행위는 그 자신에게 이익이다. 그러나 나무를 너무 많이 베면 여름 장마 때 모든 농부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각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가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99퍼센트 행동' 참가자

중력의 법칙이 작용해도 항공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듯이 이윤을 저하 경향의 법칙에는 이를 거스르는 상쇄요인이 있다.

먼저, 착취율 증가가 있다. 즉 노동자들에게 더 적은 돈을 받고 더 오랜 시간 더 고되게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1970년대 중반의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다. 정리해고와 임금 삭감, 불안정고용의 증가를 통해 착취율을 높여서 이윤을 늘린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루 노동시간을 24시간 이상으로 늘릴 수는 없고, 노동 강도 강화에도 육체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면 자본가들이 기껏 만든 상품들이 팔리지 않는 일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케인스가 지적한 바이기도 하다.

제국주의적 팽창과 제3세계 약탈을 통해 이윤율을 회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한 나라의 부를 다른 나라로 이전시

킬 뿐 전 세계적 부 자체를 증가시키지는 못한다. 그래서 오늘날 다국적 자본의 직접 투자가 주되게 이뤄지는 곳은 주요 선진국이지 제3세계가 아니다.

무엇보다 자본주의가 이윤율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바로 공황 자체를 통한 구조조정이다. 공황 속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파산하면 살아남은 자본들은 그 기업을 헐값에 사들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게다가 공황기에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겁이나 더 나쁜 보수와 노동조건을 받아들이기 쉽다. 불황이 길어지면 이자율도 떨어져서 돈 빌리기도 쉬워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윤율을 회복하고, 자본주의는 영원히 호황과 공황을 반복할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가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주의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집중), 경쟁하는 기업의 규모는 더욱 커지

게(집적) 된다. 예컨대 현재 세계경제는 다국적 기업 수백 개가 세계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빅5’가 좌우한다.

이 상태에서 거대 기업이나 은행이 하나라도 파산하면 나머지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게 된다. 그 기업과 관련 있는 기업과 은행까지 도미노처럼 타격을 받는다. 이들의 이윤은 갑자기 손실로 바뀐다.

노년기

이제 몇몇 기업이 무너지고 다른 기업들은 이득을 보면서 위기가 해소되기는 힘들어진다. 오히려 파산하는 거대기업이 다른 기업과 은행들까지 물귀신처럼 수렁으로 끌고 가면서 위기는 더 깊어진다.

이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위기가 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설명해 준다. 또 당장의 위기를 막으려고 국가가 뛰어들어 부실 기업을 억지로 살려내도, 결국 더 큰 위기가 돌아오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는 전쟁 같은 야만적 방법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려 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자본주의는 1930년대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차세계대전이 필요했다. 끔찍한 파괴와 살육을 낳는 전쟁이 자본주의에게는 부활의 기회가 된 것이다.

앞에서 ‘인간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사는 것처럼 자본주의는 공황과 호황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체제의 청년기 때는 호흡이 원활하고 규칙적일 것이다. 하지만 체제가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호흡은 거칠어져 들숨(호황)은 짧아지는 반면 날숨(공황)은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기침, 가래, 천식이 들끓을 것이다.

이 병든 환자는 결코 저절로 죽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고통전가를 받아들이며 생생한 피를 이 환자에게 넘겨줄수록 생명을 연장해 갈 것이다. 반면 노동자들이 이 환자를 무덤에 처넣고, 재빨리 흙을 덮어 버린다면 인류의 회생과 야만에 의존한 이 체제는 숨을 거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전지윤

반자본주의 연재 ⑤

왜 전쟁은 끊이지 않는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연재의 마지막 순서다.

- ①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 ② 시장은 효율적인가
- ③ 금융화와 금융자본만이 주된 문제인가
- ④ 기후변화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 ⑤ 국가가 시장의 광기를 통제할 수 있는가
- ⑥ 왜 전쟁은 왜 끊이지 않는가?

미국의 진보 언론인 톰 앵겔하트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미국 지배층을 두고 “전쟁 중독자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으로 미국 권력자들은 미국인들의 50년치 사회보장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낭비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미친 짓이다. 그러나 전쟁의 원인은 단지 일부 전쟁 중독자들의 호전성 때문은 아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대량살상무기가 지속적으로 생산·사용되는 가장 야만적인 전쟁이 계속됐다. 제1차세계대전에서는 1천4백60일 동안 1천만 명이 죽었다. 그 뒤에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난 제2차세계대전에서는 도시 폭격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최초로 핵무기가 사용됐다. 자본주의의 전쟁이 특별히 더 야만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내적이고도 구조적 힘이야말로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자본주의의 핵심인 경쟁은 단지 경제적 경쟁으로 끝나지 않는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경쟁하는 다수자본”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인간함을 쓴다. 이것은 결코 평화롭지 않은 과정이다. 판매시장과 원자재 확보, 생산기지 장악, 투자협정 체결 등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자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경쟁

무엇보다 자본가들은 국가 권력에 의존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다른 국가를 이기려고 역시 치열한 경쟁에 나선다.

그런데 경제적 경쟁이 국가들의 경쟁으로 이어지는 무대는 국제기구와 각종 경제협정 같은 수준을 넘어서 군사적 기구와 군대의 영역으로 이어진다.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4분의 1이 경유하는 소말리아 해역에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과 ‘대조영함’을 파견한 것이 아프리카의 에너지 경쟁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자유기업원도 “수출 3천억 불을 돌파한 무역대국 대한민국의 수출입 물동량 중 99.8퍼센트가 통과하는 제주 남방 해로에 제주해군기지가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체제의 불박이 장땀인 경제적 경쟁이야말로 무장력 증가와 전쟁의 동력인 것이다. 세계가 경쟁하는 열강들 사이에서 분할·재분할되는 제국주의 질서를 분석한 러시아의 혁명가 부하린은 “무기의 존재가 전쟁의 주요 원인이고 추동력이 아니라 반대로 경제적 갈등의 필연성이 무기의 존재를 조건지운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세기 이후 자본주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 유럽 강대국들이 식민지 쟁탈에 열을 올리는 과정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제2차세계대전에서는 1939~45년에 5천만 명이 죽었다. 미국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열강이 되고자 패색이 짙은 일본에 핵폭탄까지 투하했다.

한국전쟁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힘겨루기 속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에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폭탄을 쏟아부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들은 세계를 몇 번이나 파멸에 몰아넣을 양의 무기를 만들며 군비경쟁을 했다.

신자유주의도 단지 무역과 기업 자유

확대만을 뜻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등을 통해 힘을 과시하며 다른 국가들이 무역·투자·외채 협상에서 미국의 지도에 복종하도록 강제했다.

무상주택 8백만 채의 건립 비용, 전 세계 어린이 5억 3천만 명의 건강보험 비용, 4천3백만 명의 대학 등록금으로 환산되는 비용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으로 쓰였다.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데 쓸 수 있었던 돈을 살상에 쓰는 것에 대한 분노는 경제 위기가 깊어질수록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분노는 야만의 진정한 원인인 자본주의를 과녁으로 삼아야 한다.

전쟁은 자본주의의 액세서리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내장이며 자본주의의 핏줄이다. 상대를 무너뜨려야만 살 수 있는 파비르네 나는 자본주의적 경쟁의 최종 착역이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들의 눈망울에 가슴이 저리는 사람들은 전쟁의 원인인 자본주의에도 반대해야 한다.

김여진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1월 14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전교조

교원평가 반대 투쟁, 돌파구는 있다

올해는 교원평가 시행 2년째다. 교원평가 도입 전에는 정부의 교원평가를 수용해 그 안에서 독소조항을 없애자는 주장도 있었고, 교사들이 평가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교원평가는 몇 개 문항의 체크리스트로 교사들을 점수 매겨 줄을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했다. 업무 폭증, 교육 주체들의 갈등 심화, 관리자와 교과부의 통제 심화, 수업 파행으로 얼룩진 교원평가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교원평가 반대를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논쟁했던 이들의 노력이 옳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전교조는 교원평가 중단을 요구하는 학부모·교사 2만 2천여 명의 선언을 교과부에 전달했다.

그런데 매우 아쉽게도 전교조 지도부는 선언을 열의있게 조직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교사들은 6천 명 정도만이 선언에 함께했다. 지난해 동료평가를 거부한 교사들이 4만여 명이나 됐고, 기층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보면 적은 수다.

지도부는 지금 ‘동료평가 거부’라는 한 줄뿐인 지침만을 내린 채, 실질적 대응은 지부와 지회에 맡겨두고 있다.

그러나 기층 교사들 사이에선 동료평가 거부만을 두고도 물음이 많다. 대통령령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동료평가 거부 수준은 어때야 하는지, 거부



11월 1일 교원평가 반대 선언 기자회견. 기층의 불만을 하나로 결집시켜 투쟁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운동을 어떻게 확대할지, 학생·학부모에게 반대 선동을 해도 되는지 등.

가능성

지도부는 이런 물음에 답하며 동료평가 거부를 확대하고, 투쟁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사들을 설득하고 운동을 확대할 수 있다.

비록 지금 현장 교사들의 자신감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변화된 상황을 적극 활용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올해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교원평가에 대한 강제성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강원 교육감은 강제 참가를 금지하고 자율적 참가를 보장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청의 강요가 줄었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학부모 참가도 저조하다.

특히, 전보교육감이 교과부 계획을 거부하고 학교 자율로 평가 방법을 선택하라고 한 결과, 서술형 평가방식을 선호하는 학교들이 많아졌다.

정부는 교원평가 법제화가 어려워 지자 공여지책으로 강제성을 높이려고 대통령령을 만들었지만,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파열구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런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 전복지부가 투쟁을 통해 교육감을 압박해 자율성을 확보한 것처럼, 진보교육감이 있는 다른 지부들도 학교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더 나아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교육개혁의 과제로 교원평가 전면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

김연오 전교조 조합원

세종호텔

더 많은 조합원들을 투쟁에 동참시켜야

부당 전보·구조조정과 민주노조 탄압에 맞선 세종호텔 노조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10월 28일에는 이번 투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호텔 정문에서 의미있는 규모의 집회도 개최됐다. 평일 낮인데도 수십 개 노조와 단체에서 1백50여 명이 참가했다.

압력을 느낀 사측은 집회 참가를 막으려고 조합원들의 오후 출근시간을 변경하고, 연차를 불허하고, 시비를 걸고 감시를 하는 등 신경질적으로 나왔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위축되지 않고 비변과 중식 시간을 이용해 집회에 참가했다.

김상진 민주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노조의 원칙과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 전보를 당한 김성기 조합원은 투지를 불태웠다. “어떻게든 승리해서 나중에 이런 일을 당할 사람들에게 작지만 단단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자신감

그동안 노동자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쌓여 왔다. 사측은 복수노조 시행을 악용해 친사용자노조 설립을 지원·개입하고 일방적으로 부서 통폐합과 부당 전보를 통해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분노를 토해내는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화답했다. “서비스연맹은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 사전 결의대

회를 이곳 세종호텔 앞에서 개최해서 세종호텔을 뒤덮었습니다!”

조합원들은 고무됐다. “이렇게 많은 단체가 연대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사측의 협박에 못 이겨 친사용자측 노조로 옮겨간 조합원들조차 “이렇게 많이 모일지 몰랐다”며 “투쟁이 꼭 승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인근 호텔 노조들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지난해 민주노총을 탈퇴했던 롯데호텔 노조에선 최근 민주파 후보가 사측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당선됐다. 사측의 전횡을 경험한 노동자들이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다시 민주노조를 선택한 것이다. 밀레니엄 힐튼 호텔 노동자들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 중이다.

이런 상황은 서로에게 자신감을 줄 것이다.

서비스연맹은 13일 세종호텔 앞에서 1천여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조합원들을 최대한 많이 참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사측에게 압력을 줄 것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사측의 완강한 탄압 속에 움츠러 있는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줄 것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악랄한 사측의 기를 꺾을 수 있다.

이재환

독자토론광장

11월 14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Letter@left21.com

쌍용차 파업 집회 참가 벌금형 2차 재판 진술권도 보장 않는 우익 판사에 맞서다

나는 2009년 쌍용차 파업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게 불법적으로 연행됐다. 검사는 1백35만 원이라는 벌금형을 약식명령했지만, 올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무리한 탄압 때문에 판사가 증거불충분 판결을 내린 것이다. 통쾌한 승리였다.

그러나 검사는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다.

검사의 항소장에 답변서를 작성해 보내던 날, 나는 한 기사를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날 쌍용차에서 17번째 노동자 죽음이 있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우리의 구호는 17번이나 반복적으로 증명됐다. 이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 죽음 앞에 사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난 뻔뻔하게 항소를 한 검사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11월 1일 2심 첫 재판 모두진술에서 나는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규탄했다. 판사는 나를 제지하고 나섰다. 그래도 나는 주장을 계속했다.

“정부와 검찰에게 분명히 경고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한 희망의 버스 참가자들, 1퍼센트를 대변한 나경원에 맞서 투표장을 찾은 사람들, 전 세계 거리에 쏟아져 나와 99퍼센트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 한미FTA에 반대해 국회 앞에 모이고 있는 사람들의 칼끝은 바로 당신들을 겨누고 있

습니다! 탄압은 부메랑이 돼 당신들이 비호하고 있는 이 체제의 심장에 박힐 것입니다!”

파렴치한

내가 “칼끝”을 얘기했을 때 판사는 진술을 중단시키려 했고, 내가 뒷부분을 마저 읽자 나를 법정에서 퇴장시켰다! 나는 끌려가면서도 “정치적 사건에서 왜 정치를 배제하라는 것입니까!” 하고 당당히 맞섰다. 판사가 모두진술을 허락한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선 왈가왈부할 수 없다.

재판을 방청한 동지들도 나의 진술권을 옹호해 항의했다. 판사는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을 감치시키려고도 했다. 분노스러운 일이다.

고맙게도 재판 소식을 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한 인권변호사가 무료로 나를 변호해 주기로 했다. 다음 재판에선 변호사와 함께 진술권을 확보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이날은 검사가 신청한 증인 심문도 진행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선 최후진술까지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날 방청석에 더 많은 동지들이 함께해 준다면 검사와 우익 판사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힘을 실어주길 호소한다.

김무석

다음 재판은 11월 29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에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208호에서 열린다.

분노와 저항의 도가니가 된 한미FTA 저지 집회

11월 2일 여의도 앞 한미FTA 저지 긴급 국민 행동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건설해 진보 단체·정당 등과 함께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한나라당의 꿈수가 사람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촛불의 물결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2008년에 촛불시위에서 느낀 설렘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막무가내 안건 상정이 사람들의 분노를 차오르게 했고, 트위터에서 시민들은 여의도로 모이자고 서로를 조직해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분노만이 아니었습니다. 싸워야 한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자유발언대

에서 한 시민은 한미FTA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담은 리플렛 4천 장을 만들어 지하철에서 혼자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집회에 참가했다고 했습니다.

한 뮤지컬 배우는 눈물을 흘리며 “요즘 남경필이 언제 상정해서 통과시킬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며 너무 화가 나서 여의도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한미FTA에 반대하는 <레프트21>은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관심을 받았습

니다. “한미FTA 저지하자”라는 <레프트21> 헤드라인만 보고도 신문이 불타나게 판매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돈을 받으면 명백히 좋은 기사만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독자들의 지지금으로만 운영하는 독립

언론이다”라는 소개에 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지지금을 주시며 신문을 선풍 구입하는 벅타이 부대도 있었고, “전 세계 99퍼센트의 저항 소식을 담은 신문”이라는 소개에 궁금해 하며 구입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나는 이렇게 신문 한 부만 사는 것이 부끄럽고 앞으로 퇴근하면 자주 올 거다. 정말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옆에 앉은 친구에게도 적극 <레프트21>을 권하는 훈훈한 경험도 했습니다.

가판대에 가져다 주시는 간식과 지지, 뜨거운 눈빛과 분노, 저항의 자신감...

99퍼센트에 속하는 사람들의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오늘이었습니다.

이슬기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다함께 서울 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99-13 3층 303호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서부 공개토론회

위기, 저항,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

연사: 강동훈 (<레프트21> 기자)

일시: 11월 17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CNNtheBiz (홍대입구역 9번 출구 합정역 방향 도보 1분)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324-3400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west.atg@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2-6338-2395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jbforum 서울 중구 인현동 2가 189-2 201호



정권을 뒤흔드는 그리스 민중 투쟁

‘민중을 위한 디폴트’가 대안이다

그리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총리 파판드레우는 노동자 투쟁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국민투표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시간을 벌어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지도자들, 특히 강대국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은 이를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마치 거만한 식민 본국 정부가 해외 식민지 총독에게 명령을 내리듯이 파판드레우에게 국민투표 실시 결정을 철회할 것을 명령했다.

유럽연합 정부들이 말하는 이른바 ‘연대 정신’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파판드레우는 이 명령을 수용해 결정을 번복했다. 그는 최근 총리 신임 투표에서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그의 정치 생명이 끝난 것은 명백하다.

그는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층 노동자와 민중은 새로운 연립정권이 기존 정책을 지속하는 한 새 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정치 위기가 발생한 것은 유럽연합, IMF, 유럽중앙은행과 그리스 정부가 민중에게 강요한 긴축(내핍) 정책 때문이다. 그리스 국가 채무 문제는 2008년 전 세계적 위기가 발생한 뒤 세금이 줄고 그리스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금융권 부채를 대거 국가 부채로 흡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럽연합, IMF, 유럽중앙은행과 그리스 정부는 평범한 그리스의 민중에게 위기 해결의 대가를 떠넘기기 위해 가혹한 긴축 정책을 시작했다. 전 세계가 불황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출까지 대폭 줄이자 그리스 경제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지금 그리스 상황은 2001년 아르헨티나 공황을 떠올리게 한다. 전기가 들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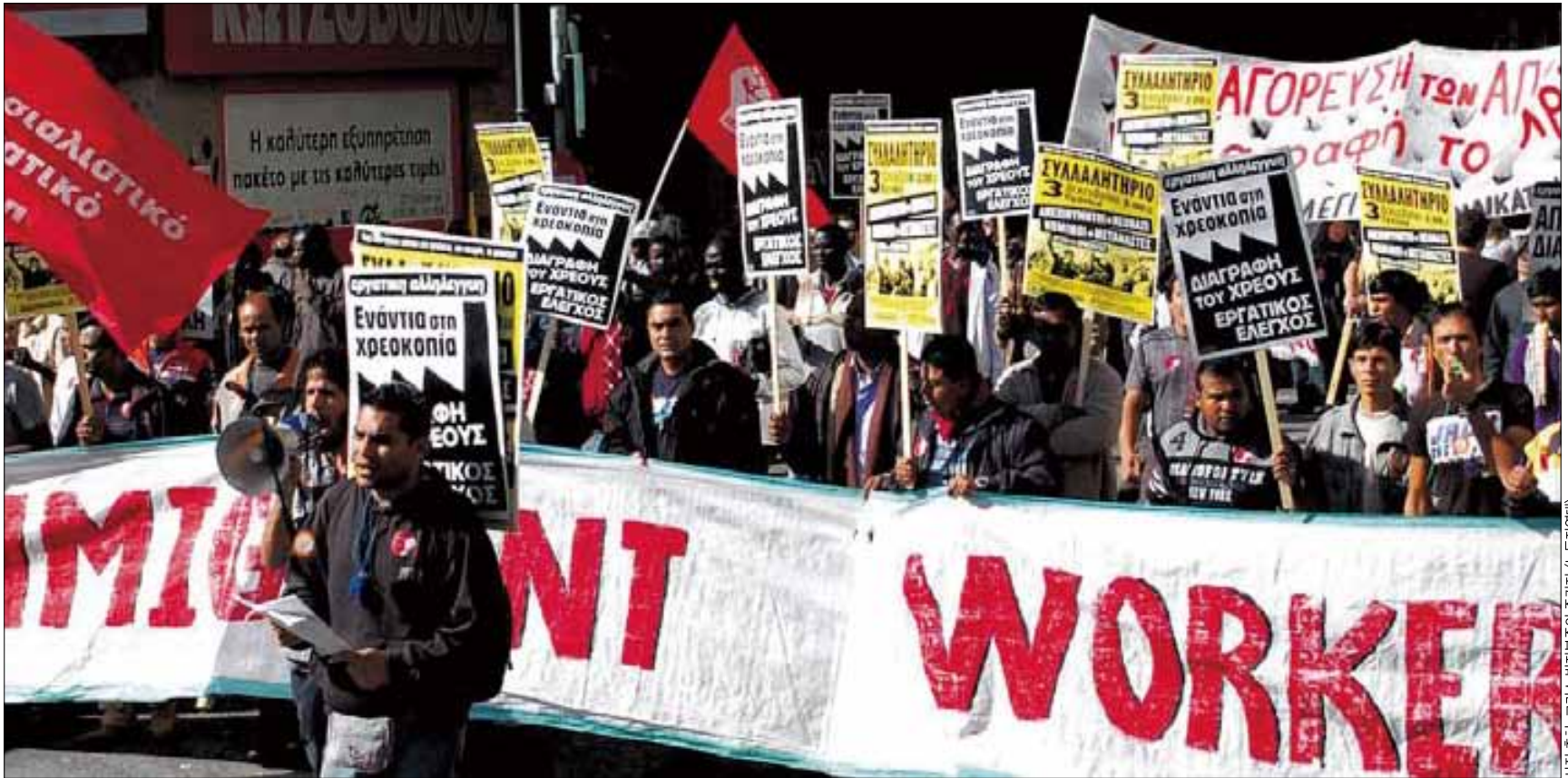


사진 출처: 그리스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연대)

10월 19~20일 그리스 총파업에 참여한 이주 노동자들. 정부를 집어삼킬 정도로 투쟁이 커지고 있다.

는 집이 드물고 사람들은 밖에 모여 모닥불을 피우고 있다. 병원에는 약이 없고 학교에는 교과서가 없다. 지배자들의 ‘구제’ 정책은 그리스 민중을 죽이는 정책이었다.

그리스 노동자와 민중은 긴축이 시작된 지난 3년 동안 15차례가 넘는 총파업을 벌였다. 최근 긴축의 파국적 효과가 더 커지자 사람들의 분노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전통적으로 10월 28일은 1940년 베니토 무솔리니의 침공을 물리친 것을 기념해 군사행진을 벌이는 국경일이다. 그러나 올해 그리스 민중은 도로를 점거하고 군사행진을 반정부 시위로 바꿔 버렸다. 그리스 대통령은 연단에서 경례를 받을

준비를 하다가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다른 도시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관료들은 성난 군중에 쫓겨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민중을 위한 디폴트

이제 대안을 둘러싼 논쟁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스의 반자본주의 좌파는 “아래로부터의 디폴트” 또는 “민중을 위한 디폴트”를 주장한다. 정부의 디폴트와 민중 디폴트는 밤과 낮처럼 다르다.

노동자들이 주도해서 부채를 탕감한다면 은행은 고통을 겪겠지만 노동자들은 혜택을 얻을 것이다.

은행과 투기꾼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을 멈춘다면, 학교나 병원을 폐쇄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임금과 연금을 삭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물론 부채를 청산하고 지급을 거절한다면 금융 시스템에 커다란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민중을 위한 디폴트가 은행에 대한 노동자 통제와 밀접히 연결돼야 하는 이유다.

은행 노동자들은 부자들이 자본을 해외의 조세 천국으로 빼돌리는 것, 즉 경제를 망칠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힘이 있다. 은행 노동자들은 은행들이 모기지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집을 회수하는 것을 막을 힘도 있다.

이는 백일몽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이미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내는 중앙 컴퓨터실을 점거하기로 결정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실업자들이 요금을 지불하지 못

하더라도 전기를 끊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리스 좌파는 이런 선제적 행동들을 방어하고 일반화하려고 분투하고 있다.

물론 유럽 지배자들은 그리스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길을 간다면 필사적으로 싸울 것이다.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쫓겨날 것이고 투기꾼들은 그리스 경제를 공격할 것이다. 따라서 유럽 전역 모든 노동자들의 연대가 중요하다.

그리스 투쟁은 은행들의 탐욕이 아니라 인간 필요를 우선순위에 두는 세계로 향할 문을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11월 17일 또 다른 긴축안 통과 기도에 반대하는 파업 투쟁을 벌일 것이다. 미친 체제의 논리에 맞선 그리스 노동자 투쟁은 계속된다!

월가 ‘점거하라’ 운동

오클랜드 ‘99퍼센트’의 파업이 성공하다

최근 우파들은 ‘점거하라’ 운동이 변질됐고 침체하고 있다고 음해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에서 ‘오클랜드를 점거하라’가 11월 2일 벌인 파업은 대성공이었다. 교사와 항만 노동자들은 병가와 휴가를 내고 사실상 파업을 벌였다. 학생 수백 명이 학교 문을 박차고 나왔다. 상점 70퍼센트가 시위에 지지를 보내며 문을 닫았다. 시위대 수천 명은 은행과 항만으로 행진해 이들을 ‘봉쇄’했다. 오후에 시위대 수는 1만 5천으로 불었다.

이날 시위는 지난 10월 말 오클랜드 경찰이 잔인하게 시위대를 공격하고 이라크 참전 군인 스타트 올센에게 중상을 입힌 것에 항의해 계획됐다.

이 결정이 내려진 후부터 파업 호소문 수천 장이 오클랜드 시 곳곳에 붙었다. 지역 노조 수십 개와 일부 고등학생들이 행동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거의 모든 지역 신문과 텔레비전 방송국도 연일 이 소식을 보도했다. 모든 지역 노조를 포괄하는 연합체인 중앙노동자위원회도 지



오클랜드 파업 지지를 선언한 항만노조

지를 표시했다.

경제 위기 발생 후 3년 동안 오클랜드 주민 수만 명이 자기 집에서 쫓겨났다. 정부의 공식 실업률은 15퍼센트이며 실질 청년 실업률은 거의 50퍼센트에 달한다.

이에 맞서 청년 등 신세대 활동가들이 노조에서 오래 활동한 베테랑 급진 활동가들이 연대하기 시작했다. 이런 결합 덕분에 올센이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자 즉각 총파업을 결정할 수 있었다.

오클랜드 투쟁은 ‘점거하라’ 운동의 방향에 관해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위대가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에 호소한 것이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에 관해 대단히 의미 심장한 지적을 했다. “이것이 새로운 좌파 정치의 시작이 되려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해야 한다. 첫째, 설득력 있는 대안 이데올로기가 나타나야 한다. 둘째, 사회적 힘이 그것을 뒷받침해야 한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사회주의가 대안 이데올로기를, 조직 노동계급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힘의 구실을 했다.” 물론, 1퍼센트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그인 마틴 울프는 오늘날 이런 계급정치가 부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월가 점거 운동의 탄생과 오클랜드 파업은 그것이 자본주의 심장부인 미국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힘껏 보여 줬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다.

계간
마르크스21
11호 2011년 가을
가격 : 16,000원

이론과 실천의 통일

특집 알렉스 캘리니코스 2011년 방한 강연
오늘의 정치 전망과 혁명적 전략·전술 / 자본주의의 대안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 /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의 의미

쟁점 I
통합진보정당과 국민참여당 _ 김하영
금융 위기와 민스키 _ 이창구
발전국가론과 한국의 산업화 _ 강동훈

쟁점 II
인종차별과 다문화주의의 변모하는 인종차별 _ 리처드 시모어
문화와 다문화주의 _ 캐리스 젠킨스

세계관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와 생태학 _ 김중환

마르크스주의의 고전 읽기
VI 레닌의 <국가와 혁명> _ 차승일

서평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
지역 대안론의 의미와 한계 _ 정병호

피드백 사노위 실패의 교훈과
혁명당 건설 투쟁의 연속성 _ 이형로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알라딘, 예스24, 인타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 2년 120,000원 | 3년 180,000원 | 5년 300,000원 | 7년 420,000원 | 10년 600,000원

(마르크스21)의 지속적 발간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www.marx21.or.kr)에서 휴대문 결제, 계좌 이체, 신용카드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